

1894년 농민전쟁 100주년 기념 5개년 연구사업

제3차년도 학술심포지움

1894년 농민전쟁의 정치·사상적 배경

일시▶ 1992년 5월 16일(토)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연세대학교 장기원기념관

주최▶ 한국역사연구회

후원▶ 역사비평사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역사연구회는
올바른 세계관에 입각한 과학적 역사관을 수립하고
끊임없는 실천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조국의 자주적 통일에 동참하려는
300여 명의 진보적인 소장학자들의 모임입니다.

한국역사연구회는
공동연구를 통해 체계화한 과학적 역사학을
사회의 변혁과 진보를 실현해 가는
민중에게 보급하는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연구회 활동 안내

한국역사연구회는 출범 후 3년여 동안에 연구회원 300여 명, 일반회원 250여 명의 규모로 발전하였습니다. 한국역사연구회는 '한국사특강' 등의 대중강좌를 개설하고 《역사와 현실》 1~6호와 많은 연구서를 출간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학술대토론회(연 1 회)
2. 연구발표회(월 1 회)
3. 대중강좌
4. 공동연구 · 공동학습
5. 회지 《역사와 현실》 《회보》 《소식지》 발간
6. 기타 본회의 목적에 맞는 사업

회원가입·회비납부 안내

1. 연구회원은 본회의 공동연구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본회 소정의 내규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구회비 : 월 1만원 (대학원생 5천원)
2. 일반회원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자격 : 본연구회의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
 - 2) 의무 : 회비납부(연 2만원, 대학생은 1만원)
국민은행 820-01-0028-630
상업은행 183-05-029952
우편대체구좌 012187-31-2837458
은행지로 7526480예금주 한국역사연구회
*입금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창구에 부탁해 주십시오.
**국외에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우송료 본인 부담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송료 : 일본 7,000원, 미국·유럽 12,000원
- 3) 권리 : 연구발표회와 학술토론회에 참가
회보(연 4회 발간)와 회지(연 2회 발간) 수령

1894년 농민전쟁 100주년기념 연구논문집
농민전쟁 100주년기념 연구논문집

1894년 농민전쟁연구 1

농민전쟁의 사회경제적 배경

근대변혁기 민중이
역사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했던 소중한 경험인
'1894년 농민전쟁'
그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5개년 연구사업의
첫 산물.

총론

1894년 농민전쟁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변혁주체의 성장/이영호

제1부 봉건체제의 파탄과 농민층의 몰락

19세기 말 호남지역 지주제의 확대와 토지문제/왕현중

19세기 부세운영의 변화와 그 성격/고동환

개항기 봉건적 국가재정의 위기와 민중수탈의 강화/서영희

제2부 제국주의 침탈과 상품화폐경제의 변동

개항후 외국상인의 침투와 조선상인의 대응/나애자

화폐유통구조의 변화와 일본금융기관의 침투/도면희

곡물의 대일수출과 농민층의 저항/하원호

제3부 신분계급구성의 변동과 변혁주체의 성장

19세기 향촌사회 지배구조와 대립관계/정진영

18, 19세기 계급구성의 변동과 농민의식의 성장/최운오

19세기 농민항쟁의 전개와 변혁주체의 성장/고석규

한국역사연구회 지음

역사비평사

전화 279-0157~8

365쪽 / 6,400원

1894년 농민전쟁 100주년기념 연구논문집
 농민전쟁 100주년기념 연구논문집

1894년 농민전쟁연구 2

18·19세기의 농민항쟁

한국역사연구회 지음

중세사회가 해체되고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18·19세기의 전 기간에 걸친
 농민들의 치열한 항쟁을
 민중의 성장이란 관점에서 종합하여 체계화한
 최고의 공동연구 성과물

총론: 18·19세기 농민항쟁의 추이/고석규
 17세기말 18세기초 농민저항의 양상/홍순민
 18세기 중·후반의 농민항쟁/한상권

19세기 전반 반봉건항쟁의 성격과 그 유형/한명기
 '홍경래 난'의 주도세력과 농민/오수창
 1862년 농민항쟁의 배경과 주도층의 성격/양진석

대원군집권기 농민층 동향과 농민항쟁의 전개/고동환
 19세기 후반 '변란'의 추이와 성격/배항섭
 개항이후(1876~1893) 농민항쟁의 전개와 지향/백승철
 대한제국기 농민운동의 성격/이운상

372쪽/6,400원

1894년 농민전쟁의 정치·사상적 배경

(공동연구)

개회사(10:00~10:10)안병우(회장, 한신대 교수)

오전발표(10:10~12:40)

제1부 ▷ 국제정세와 한반도

- 1) 19세기말 제국주의와 동아시아(김기정, 연세대 강사)
 - 2) 개항이후 청의 조선 정책(김정기, 서원대 교수)
 - 3) 개항이후 일본의 조선 정책(최덕수, 공주대 교수)
- 대표발표 최덕수/약정토론 김경태(이화여대 교수)

제2부 ▷ 지배층의 정치·사상적 동향

- 1) 집권세력의 동향(연갑수, 한국역사연구회)
 - 2) 개화파의 동향(주진오, 상명여대 교수)
 - 3) 보수유생층의 동향(김도형, 계명대 교수)
- 대표발표 김도형/약정토론 조동걸(국민대 교수)

중식(12:40~13:40)

오후발표(13:40~15:10)

제3부 ▷ 민중세력의 정치·사상적 동향

- 1) 19세기 민중의식의 성장(안병욱, 성심여대 교수)
 - 2) 동학의 교리와 정치·사회사상(우윤, 역사문제연구소)
 - 3) 동학교단의 조직과 지도부(박맹수, 영산원불교 대학 교수)
 - 4) 농민군 지도부의 정치사상(박찬승, 목포대 교수)
- 대표발표 안병욱/약정토론 정창렬(한양대 교수), 이이화(역사문제연구소 소장)

종합토론(15:20~18:00)

발표자, 토론자 전원

1. 국제정세와 한반도

1. 머리말
2. 19세기말 제국주의와 동아시아
3. 개항 이후 청의 조선 정책
4. 개항 이후 일본의 조선 정책
5. 맺음말

1. 머리말

1876년 2월 조선의 '개항'은 자본주의 시장체제가 전지구적 확대를 완결짓는 사건이었다. 전근대사회와 근대사회를 구별짓는 여러요소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일국사의 발전과정이 이제 더이상 일국사 내부의 요인만으로 총체적인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라 하겠다.

개항 이후 한국 근대사에 대한 연구는 근대 변혁운동의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농민전쟁을 비롯한 근대 변혁운동 연구는 근대사의 세계체제적 성격과 관련하여 검증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먼저 19세기 후반의 세계질서에 대해 전반적인 변화의 성격을 검토한 다음, 청·일의 조선정책에 대해 검토하였다. 청·일의 조선정책에 대해서는 각 시기 對조선정책의 內的 動因에 대해 주의하였다.

2. 19세기 말 제국주의와 동아시아

1) 19세기 후반기 세계체제의 성격

19세기 전반을 통하여 세계경제는 농업생산에서 공업생산에의 강조라는 현저한 변화로 특징지어지며, 이 기간의 발전 단계를 거치면서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명실상부한 세계체제로 확장되었다.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전자본주의국가들이 세계체제로 편입되면서 세계경제의 지리적 확대가 가속화 되었고, 그 과정은 특히 19세기 중엽 이후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었다. 19세기 전반기 이후 세계정치와 경제를 주도해 나갔던 영국의 패권적 지위는 면방직공업에 기초한 산업화에 근거하고 있었다. 영국은 경제부문의 상대적 우위 및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적어도 1870년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세계체제의 패권적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중엽 이후 세계경제의 전반적 호황국면 기간 동안 세계체제는 중요한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른바 미약한 중심부 국가였거나 혹은 半주변부 국가들이었던 미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의 후발자본주의 국가들의 산업화가 급속히 진척되거나 그 토대를 이루었고, 더구나 제 2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서구 자본주의 경제의 산업기조는 석탄과 철 중심에서 철강, 석유, 화학, 전기 중심의 산업으로 재편되고 있었다. 그 새로운 산업기조에서 독일과 미국이 선두에 서게 되면서 영국의 패권적 지위는 점차 도전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1873년 이후 세계경제가 대공황에 직면하면서 더욱 심화되었고, 서구 자본주의 열강의 무역정책의 기조도 자유무역에서 보호주의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경쟁과 갈등은 더욱 치열해졌다. 또 새로운 산업기조는 비서구 지역으로부터의 원료와 에너지원의 끊임없는 공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다. 또한 경제적 운용의 규모가 거대한 사적기업의 형태와 합작의 형태를 띄고 확대되면서 정부의 간접적 역할도 점차 증대되었다.

19세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후발자본주의 국가들이 잇달아 정치적 변혁과 산업화를 촉진시킴으로써, 또 그들 경쟁국들의 부상으로 인해 세계체제내에 영국 경제력의 상대적 우위가 상실되기 시작하였다. 달리 말하면 19세기 중반 이후 세계체제의 중심부는 새로운 산업국가의 부상으로 다원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을 촉진시킨 대표적인 국가가 독일과 미국이었고, 19세기 후반기에 들어 일본의 산업화도 중심부의 다원화의 폭을 증대시켰다. 1870년대 이후 관찰되는 이들 국가의 부상과 그로 인한 중심부의 다원화를 염두에 둔다면 이들 3국이 1860년대에 다같이 중요한 정치적인 변혁을 경험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미국은 1861년~1865년에 걸쳐 남북전쟁이라는 내전을 경험하였고, 독일은 1862년~1867년 사이에 통일을 달성하였으며, 일본은 1868년 明治維新이라는 위로부터의 정치적 혁명을 통하여 근대적 제도화를 이룰 수 있었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이들 3국은 산업화된 군사강국으로 동아시아 국제정치 질서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를 점하게 되며, 아울러 제국주의적 팽창정책과 주변부 분할 정책의 선두에 서게 된다.

2) 세계체제의 구조변동과 19세기 후반기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세계체제의 중심부 구조가 다원화되어 중심부 국가들의 시장확보 경쟁이 가속화되고, 따라서 세계체제에 편입되는 주변부가 늘어남에 따라 중심부-주변부의 구조도 큰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주변부를 분할 통치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부분의 비서구지역은 주변부로 강제 편입되었고, 그 주변부의 위상은 대부분이 식민지 상태나 보호국의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19세기 말에 이르게 되면 세계의 각 대륙이 몇몇 주요 중심부 국가들의 이익 집중도에 의해 분할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동아시아에서 그러한 침탈의 중심지역은 역시 중국이었는데, 그것은 중국의 거대한 시장성에 기인한 것이었다. 1839년의 아편전쟁과 1842년 남경조약 이후 중국은 외세의 강압에 의해 급속히 세계체제에 편입되어 갔다. 이후 일련의 무력분쟁에서의 패퇴 후 1858년의 천진조약과 1860년의 북경조약을 강요받음으로써 중국은 세계체제 편입의 조건을 모두 갖추게 되었다. 한편 동남아시아에서는 베트남이 1885년에 프랑스의 보호국이 되었고, 버마는 1886년 영국의 세력권으로 편입되었다. 베트남과 버마의 주변부에의 편입도 한편으로는 서구 중심부 열강끼리의 대결 및 갈등(동남아시아에서의 영-불의 대결)의 결과이기도 하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은 중국과 해당 중심부 국가들(프랑스와 영국)과의 대립상황에 연계되어 있었다. 말하자면 동아시아에서의 중심부-주변부 위계구조의 성립은 그 과정에서 단순히 중심

부국가-주변부국가의 쌍무적 관계에서 결정되었다기보다는 중국이 개입된 삼각관계에서 그 결과가 결정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위계구조의 성립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완전히 붕괴하면서 그것을 대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3) 조선 개항의 세계사적 의미

조선의 경우는 동아시아 국가로서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일본에 의해 이루어졌다. 일본은 강화도조약의 제 1조에 “朝鮮은 自主國이며 日本과 平等의 權을 보유한다”고 명기하여 중국 중심의 전통적 동아시아 국제관계 질서의 붕괴를 시도하였다. 강화도조약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조약을 시발로 세계체제에 있어 조선의 주변부에로의 편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한편 1882년 조미수호조약을 시발로 조선은 서구의 열강과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세계체제의 역동적 메카니즘에 본격적으로 노출되었다.

특히 19세기 중엽 이후 꾸준히 남하정책을 추진해 오던 러시아에게 한반도는 좋은 지정학적 이점을 제공하는 지역이었다. 물론 농민전쟁 이전의 시기는 아직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완공되기 전이라 러시아의 아시아 팽창이 본격화되지는 않고 있었지만 식민지와 세력권의 확보 경쟁이 당시 세계적 추세였던 점, 그리고 그 경쟁에서 영국과 치열한 대립구도를 설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반도에 러시아가 외교적 관심을 기울일 만한 충분한 근거는 주어진 셈이었다. 따라서 청일전쟁 이전까지 열강간 대결의 구조는 한편으로 조선을 어떤 국제적 질서에 의거하여 지배할 것인가에 대한 대결, 즉 청-일간의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체제의 국제적 다원화가 야기했던 중심부 열강간의 치열한 경쟁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영-러의 대결로 표면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전자는 청-일전쟁으로 결말이 나고 후자도 러시아와의 대결을 영국으로부터 위임받은 일본이 그 첨병 역할을 수행하여 러시아와 무력적 대결을 시도함으로써 종결되었던 것이다.

3. 개항 이후 청의 조선 정책

1) 개항 이후 ‘以夷制夷’ 정책

영국 자본주의의 침략으로 조성된 1839년의 아편전쟁과 1842년의 남경불평등조약은 중국을 해체·붕괴시키는 시발점이자 기폭제였다. 유교의 상하질서 즉 문화의 우월·열등의식(華夷觀)에 기반해서 천 수백년 동안 유지되어온 종속체제(宗主-屬藩體制) 내에서 이른바 속국(屬國)의 대열에는 조선, 琉球, 베트남, 라오스, 버마, 티벳, 동·서 파키스탄, 몽고 등의 국가들이 포함되며, 이들 나라가 띠처럼 중국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런데 1880년대 중엽까지 서양 자본주의 국가들과 일본의 침략으로 조선과 몽고만을 남기고 이 띠가 모두 제거된 것이다.

조선만이 문제였다. 몽고는 상대적으로 별 문제가 아니었다. 노대국의 위신을 그나마 조선에서 되살려야겠다는 자존심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강화도 불평등조약 이후 일본과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청의 안전을 도모할 최전선으로서의 조선의 전략적 가치가 李鴻章을 포함한 洋務派 官僚들의 시야에 포착된

것이다. 이를 좀 더 부연설명해 보면, 한반도를 둘러싼 외세의 침략은 중국의 東方政策, 일본의 大陸政策, 러시아의 南下政策간의 상호 각축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청의 조선에 대한 ‘以夷制夷’ 또는 ‘以毒攻毒’의 정책은 이러한 배경 아래 형성되었다. 1879년 琉球를 일본이 병탄시킨 직후의 일이었다. 1876년 “朝鮮國은 自主之邦이며, 日本國과 平等之權을 保有한다”라는 저 유명한 강화도불평등조약의 천명에도 아무런 대항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던 청이었다. 이홍장은 그의 군사고문이자 前 福建巡撫였던 丁日昌(1823-1882)의 ‘以夷制夷’ 정책을 對조선정책의 기본 노선으로 채택하였다.

“致書朝鮮原任太師李裕元 勸以密修武備 慎固封守 與英法德美諸邦 逐漸立約 卽以牽日本 卽可備禦俄羅斯 (『李文忠公全集』)”

‘勸以密修武備’는 (1) 근대병기 제조와 병기 수리를 위한 領選使 일행의 군사 유학생 派淸을 필두로 해서, (2) 병기를 제조하는 機器廠의 창설, (3) 서울의 병력 3만을 책정하여 새로이 군제를 개편하고 교관을 파견하며 이들에게 근대 무기를 제공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가운데 (1)은 실현되었고, (2)와 (3)은 축소 조정되었다. 말하자면 조선의 강병책을 청국이 지원하여 조선으로 하여금 일본과 러시아의 공격에 대적하게 하는 이이제이 정책의 등장이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이이제이 정책이었다. “與英法德美諸邦逐漸立約”은 조선과 서양열강간의 불평등조약을 체결하도록 청이 조선에 강요함으로써, 조선에서 1876년부터 지반을 구축하기 시작한 일본의 독점적인 경제침탈구조를 견제 또는 파괴시키자는 것이었다. 다 알고 있듯이, 청의 강력한 개입으로 조·미, 조·영, 조·덕의 불평등조약이 ‘임오군란’ 직전까지 모두 성사되었다.

그러나 군사적이고도 외교적인 이이제이 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군사지원의 규모가 너무 적었기 때문이며, 열강과의 조약 체결이 일본을 견제하는데 효과가 거의 없었고, 심지어 미국은 조선의 속방규정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교섭과정에서 魚允中(1848-1896)이 ‘萬國公法’ 정신에 따라 조선 외교관의 북경주재(派使駐京) 문제를 들고 나왔다. 순종에 길들여진 조선이 종속체제에 정면 도전한 것이다. 조선을 묶어 둘 필요성이 더욱 절절해진 것이다. 이러한 차에 1882년 7월 ‘임오군란’이 터지자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조선에 직접 개입, 간섭하게 되었다. 동방정책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

2)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의 締結 - 조선의 ‘屬邦’ 천명 -

임오 군인폭동 직후 李鴻章(1823-1901)의 절대적인 통제하에 있었던 北洋陸軍 3천명의 서울 점령과 興宣大院君(1820-1898)의 납치사건은 서울 장안을 공포에 떨게 하였으며 전국을 진동시켰다. 이홍장과 양무파 관료들은 숨들릴 틈없이 50만 兩의 거액 차관을 선뜻 조선정부에 제공했고 사흘 후인 1882년 10월 4일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점령 정책, 차관제공 정책, 장정체결 정책은 삼자 유기적인 관련 속에서 조선을 청의 반식민지로 전락시키는 매체로서 작용하게 되었다. 청의 동방정책의 질적 변화였다. 곧 ‘以夷制夷策’의 포기이기도 했다.

조청장정은 전문과 8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은 청의 속방

이다' 라는 규정을 (1) 差等體系의 새로운 창출(고종과 북양대신의 동격규정, 駐津大員과 商務委員의 차등규정, 조선지방관과 북양해군 함장의 동격규정), (2) 자본주의 경제 침탈 방식의 채용 또는 확대 적용(관세협정권, 연해무역권, 내지통상권, 서울상점 개설권, 국경육로무역권, 홍삼세울협정권 등의 무역침탈과 서해안 어채권, 초상국 운선항로 개설권 등의 이권침탈), (3) 자본주의 군사 정책의 채용 또는 확대 적용(군합순찰권, 군합정박권, 북양함대의 조선국방 참여권)이라는 세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형상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 보아야 할 조문은 조선의 대청의존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북양함대의 조선국방권 탈취이다.

“中國兵船 往朝鮮海濱游弋 並駛泊各處港口 以資捍衛(조청장정 제7조)”

결국 이 조청장정은 전통적인 종속체제를 재편하여 조선의 청국 식민지화를 천명한 문서이다. 따라서 조청장정은 의례적인 관계와 차등체제의 창출이라는 조청간의 전통적인 동양질서에 기반하면서 자본주의의 약육강식적인 국제질서를 지향하고 있었다. 환언하면, 장정에 규정된 ‘屬邦’은 종래의 文化的인 속국과 정치·경제적인 식민지와의 혼합형태인데, 중국의 안전을 위한 조선의 전략적인 가치 때문에 그 비중이 전자에서 후자로 이동되고 있었다.

3) 甲申政變 이후 종속체제의 재편 - 屬邦化政策 -

1884년 12월의 갑신정변의 실패는 조선에서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을 소멸시키는 계기였다. 그리고 이 정변을 뒷마무리한 청·일간의 친진조약에 따라 한반도에서 청·일 양군의 공동 철수가 실현되었다(1885. 7. 21; 청군 1,500명, 일군 152명). 한반도에서 힘의 공백 상태가 형성된 셈이다. 그러나 조청장정에 규정된 북양해군의 조선 국방권 분담이 이 공백을 메꾸었다. 갑신정변 이후 이홍장의 조선정책은 조청장정의 기본 골격에 기반하면서 구체적으로 추진되어 나갔는데, 이 정책을 (1) 군사력강화 (2) 경제 침탈 (3) 외교간섭 면에서 보기로 한다.

(1) 군사력강화의 대표적인 사례는 북양함대 함장의 인천 주재, 압록강 어귀 奉天의 육군 증강, 그리고 西路電線(인천-서울-평양-의주)의 가설이다. 함장을 인천에 주재시킨 것은 청·일 육군의 철수 직후였다. 또한 군합 3척을 인천에 고정 배치시킴으로써 인천은 북양함대의 1개 기지로 전략되었다. 이홍장은 奉天의 鳳凰城 邊門에다 1885년 10월 발해만의 營口에 주둔하고 있었던 부대를 이동시켜, 유사시 조선에 즉각 투입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에 봉황성과 궁극적으로는 北京과 연결되는 군사용 서로전선이 가설 완공되었다. 청의 10만兩 차관과 조선민중의 강제 노동력의 합작품이었다. 준공 후에도 지속된 강제 동원과 전선 유지비의 강정은 배청의식의 분출구였으며, 이는 농민전쟁 당시 반의세 투쟁으로 접류, 승화되었다.

(2) 이 시기의 경제 침탈은 무역·이권·차관 등의 다양한 형태를 띠면서 청일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압축되었다. 무역의 총규모는 1878년 42만 6천여 圓에서 1893년 557만 9천여 圓으로 크게 늘었고(수입은 日商이 주로하고 수출은 日商의 주도에서 청·일 양국상인의 균등한 경쟁으로 변질되어 갔다), 조선상인은 외국과의 직무역 거래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游勇, 游商, 游民’으로 불리우는 청국의 하층민이 전국의 장시에 걸쳐서 사기와 폭력을 일삼고 지방 관아를 조롱·협박하면서 조선의 유통질

서를 다른 면에서 교란하고 있었다. 유통질서의 교란은 밀수의 성행으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황해도 평안도의 접경해면에 청국 상선이 9개월 동안 150-160척이나 모였다는 기록이나 인천해관이 위축될 정도로 밀수가 심하다는 보고는 바로 서해안이 청국 밀수의 낙원이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 시기 서울에서 세 차례나 외국 상점의 축출을 위한 서울 상인 전체의 동맹 파업과 시위 투쟁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고, 지방에서는 전국 각처에 걸쳐 청일 상인을 배척하는 사건이 잇달아 터지고 있었다. 농민전쟁 당시 반외세 투쟁의 서막인 셈이다. 이권침탈의 대표적인 사례는 어채권이다. 조청전쟁에서 빼앗긴 황해도 평안도 어채권은 서해안 전체로 확대되어 서해안은 청국어민의 앞바다로 변했고, 동해안은 일본의 내해가 되었다. 차관공세면에서도 청이 일본을 압도하고 있었다. 1882년 50 兩의 차관으로 조선해관을 장악한 청국은 1885년에 10만 兩으로 서로전선을 청국의 소유로 만들었고, 1892년에는 2차에 걸친 20만 兩으로 차관제공의 독점권을 확보한 후 1893년에도 3만 5천 兩을 제공하여 방곡령 배상금의 일부를 지불하게 하였다. 요컨대, 중국은 문화우월론에 기반하여 자연스럽게 재빠르게 정치적 간섭의 터전을 마련한 뒤 이 터전을 토대로 해서 경제침탈을 강화하여 갔다. 일본보다 뒤진 경제 침탈을 만회하고 어느 부분에 선 능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반하여 일본은 경제침탈에 기반하여 소멸된 정치간섭을 일궈내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3) 청의 외교 간섭은 1887년 주미공사로 파견된 朴定陽(1841-1904)을 워싱턴에서 서울로 강제 철수시킨데서, 그리고 1885년부터 1892년까지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의 국가로부터 차관제공을 좌절시킨 데서 두드러진다. 주미공사 파견은 조선이 자주 독립국임을 만방에 천명한 것이고, 청 이외의 다른 국가와의 차관 교섭은 청의 경제적 간섭으로부터의 탈출 시도였다. 둘 다 이홍장과 원세개의 집요한 방해 공작으로 좌절되었다. 1884년 말에 유포된 조선·러시아간의 비밀 협약설은 조선의 지배층 내부에 淸路線이 강고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 노선이 이후 1894년까지 일관되게 견지되고 있음은 위의 두 사건에서도 확인된다.

조선의 배척의식, 즉 반중국의식은 ‘속방화’정책의 추진 현장에서 양성되어 조선의 조야에 번져가기 시작했다. 특히 반중국의식은 청의 경제침탈 현장에서 결정적으로 확대되었다.

4. 개항 이후 일본의 조선 정책

明治日本の 외교정책의 최대의 과제는 서구 열강들과의 불평등조약체제의 개정문제와, 다른 하나는 조선문제였다. 전자는 1894년 7월 치외법권을 폐지하고 관세율을 인상하는 대신 內地를 개방하는 조건으로 영일통상항해조약을 런던에서 조인함으로써, 후자는 청일전쟁에서의 승리로 거의 동시기에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였다. 對韓정책 전개과정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으로 조선문제는 일본 외교의 핵심과제임과 동시에 체제구축기 국내정치 상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라 하겠다. 그런 점에서 이 시기 일본의 대한정책 전개과정은 ‘외교는 내정의 연장’이라는 명제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된다.

1) 개항 직후 일본의 조선정책

‘조일수호조규’의 제1관은 ‘朝鮮國自主之邦保有與日本國平等之權’으로 시작하고 있다. 일본의 對 조선 정책의 제 일보는 조선에서 청국의 영향력을 축소 배제시켜 나가는 것이었다. 개항 직후 일본의 대한정책은 공식적인 정부사절을 통해 시도되었고, 접근의 방식은 일본의 근대화 정책에 대한 동의를 바탕으로 조선의 근대화 정책에 참여함으로써 청국의 영향력을 감소시켜 나간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본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선정부 내에 일본에 우호적인 정치세력이 존재했어야 했다. 이를 위해 일찍부터 일본정부는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조선정부 관료의 訪日을 적극추진하였고, 유학생을 파견해 줄 것등을 요청하였다. 일본정부는 김기수가 수신사로 파견되었을 때(1876. 5. 29~6. 28) 일본의 근대화 정책의 성과를 등의 시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 그러나 조약체결을 ‘舊好重修’ 차원에서 받아들였던 조선정부의 사절단은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다. 조선정부의 소극적인 외교자세는 조약의 이행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조규의 제 5관은 부산 이외의 두 개 항구의 개방 기일을 ‘朝鮮曆自丙子二月起算共爲二十個月’(77년 10월)로 못박았으나, 실제 이 규정에 따라 원산을 개항한 것은 이보다 훨씬 늦은 80년 5월이었다.

개항 이후 조선정부의 근대화 정책은 1880년을 전환기로 하여 81년 들어 실천에 옮겨지기 시작하였다. 1880년 말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한 이래, 81년 1월 박정양, 홍영식, 어윤중 등이 일본을 시찰하였고, 계속하여 일본과 청국에 대규모 사절단의 파견을 결정하고(2월), 뒤이어 신식군대 별기군을 설치하였다. 일본의 대한정책은 통리기무아문 설치 이후 조선정부의 개화정책이 시도되면서 곧 개화파의 정치적 진출과 함께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일본군 장교가 별기군의 훈련을 담당한 것이 한 예가 된다.

2) 임오군란기 일본의 조선정책

임오군란은 일본이 겪은 최초의 반일운동이었다. 군란 중 별기군 일인교관을 비롯한 관리 4인, 민간인 1인이 살해당하였다. 군란의 보고를 접한 일본정부는 군란의 사후 문제뿐만 아니라 인천 개항 등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외교적 현안들을 일거에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전권위원 하나부사가 호위군대와 함께 인천에 도착(8월 12일)하기 전 인천항에는 정여창, 마건충이 이끄는 청국군함이 이미 인천에 도착해 있었고, 청국은 곧 무력을 동원하여 대원군을 납치(8월 26일)하고 난을 진압하였다. 이후 일본은 청국의 중재로 조선과 제물포조약(8월 30일)과 ‘수호조규속약’을 맺음으로써 사건을 일단락 지었다. 군란을 둘러싼 사태는 7월 23일 발생 이래 39일이라는 비교적 단 기간에 종결되었으나 사태의 종결이 조선문제의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지금까지 일본은 대만출병(1874)과 류큐합병(1879) 등으로 청과 일시적으로 긴장상태를 맞이한 적은 있었으나 무력행사를 포함하여 전면적인 대결의 위협으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았었다.

조선에서 일어난 반일폭동을 둘러싼 청·일의 무력 대치 상황은 일본국내 여론에 있어서 동아시아, 특히 조선문제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고조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신문들은 기사와 논평, 논설등을 통해 ‘조선변보’를 보도해 여론의 초점이 되었다. ‘천하의 인심이 이 문제로 거의 다른 것을 돌아볼 거

를이 없다' 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청국과의 무력대치 상황과 이로 인한 일반국민들의 대외 위기감 확산은 즉각 군부로 하여금 군비 확장의 필요와 정당성을 주장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일본정부는 극단적인 재정긴축 정책을 추진하던 시기였다. 국내 재정형편으로는 군비 확장은 불가능하였다. 군비증강을 위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방법 이외의 길은 없었다. 불황하의 증세정책은 이른바 자유민권과의 정부 공격에 호재를 제공할 것이었다. 이에 일본정부는 조선에서의 대외 위기의식 고조를 틈타 민간의 반발을 조직적으로 억압 통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군란 소식이 보도된 지 일주일도 경과되지 않아 전시 혹은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라 하여, 국민을 군사 통제하에 두는 '계엄령'을 발표(8월 7일)하였다. 잇달아 군의 연습과 동원시 소요되는 물자를 민간에게 부과하고 징발을 허용하는 '징발령'을 제정, 공포하였다(8월 12일). 일본정부는 임오군란을 조선과의 교섭에서는 조일수호조규의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국내에서는 명치유신 이후 이른바 체제구축기의 내부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삼았다.

3) 갑신정변 전후 일본의 조선정책

군란 이후 조선은 제물포조약 6관에 의거, 사죄사절을 파견하였다. 사절의 정사는 박영효였고 김옥균이 고문으로 동행하였다. 사절단은 개화파 인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박영효 등은 이후 3개월 동안 동경에 머무르는 동안 일본정부 주선으로 요코하마 정금은행으로부터 17만 원의 차관을 얻어 사행경비와 배상금, 그리고 유학생 경비와 국내에서 신문발간을 위한 인쇄기계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수신사 일행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은 기존의 대한정책의 연장선 상에 선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에서 청국의 속방화정책은 일본의 대한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조선정책의 핵심은 청국의 개입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조선 내 친일세력의 처리 문제였다. 일본정부는 단기간에 군비증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한 조선에서 청과의 대립은 회피하여야 했다. 조선에서 청의 영향력의 확대가 곧 조선정부 내 친일세력의 쇠퇴를 초래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개화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 일본정부의 개화파에 대한 정책이 전환한 바로 그 시기에 오히려 일본정부의 주선으로 차관을 얻어 그들의 목표를 일부 실현할 수 있었던 개화파는 일본정부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였다. 김옥균은 『갑신일록』을 이때로부터 기록하고 있다.

조선에 대한 일본의 소극적 정책은 청불전쟁을 계기로 서서히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베트남에서 청·불의 대립과 조선에 있어서 청·일의 대립이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대한정책의 전환은 현지 외교관을 통한 개화파와의 재접근으로 나타났다. 조선공사 다케조에는 개화당의 정변 계획에 관여함으로써 친일파 정권의 등장을 기도하였던 것이다.

갑신정변시 일본은 명백히 군사적으로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변 후 조일간에 맺은 한성조약에서 일본은 국서로서의 사죄와 배상금, 공사관 재건비 등을 약속받았다. 조약의 내용은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는 자에게는 외교적으로 대성공이었지만, 일본 국내의 여론은 그렇지 못했다. 일본정부가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조선국왕의 의뢰에 의해 그 호위를 담당하고 있던 일본군대를 청국군대가 공격하였고, 뒤이어 조선군대와 민중이 일본거류민을 살상하고 공사관을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임오군란 이래의 대외강경 여론이 다시 등장하는 가운데 조선을 둘러싼 정세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조선왕실이 청국에 대한 세력견제 목적으로 러시아와 비밀조약을 추진하였고,

한·러시아의 접근은 동아시아에 있어서 러시아의 진출을 염려하였던 영국의 간섭을 불러 왔던 것이다. 천진에서 청일간에 갑신정변 사후 문제로 외교적 교섭이 진행되고 있던 중 영국의 거문도 점령 소식을 접했던 것이다. 일본은 양국 군대의 조선에서의 철병과 장래 사정에 의해 군대 파견시에는 상대국에 알린다는 것만을 명시한 채 조약을 서둘러 마무리지었다.

갑신정변의 실패는 곧 조선내 친일세력의 소멸을 의미하였다. 1880년 이래 조선내 친일파 정권의 수립을 통해 한일간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긴밀화를 추구하던 일본의 조선정책은 이로써 크게 후퇴할 수 밖에 없었다. 조선 개화파의 후원자였던 후쿠자와 유키치는 조선에 영국과 러시아 세력이 등장하고, 친일개화파가 몰락하자 일본의 탈아시아를 공언하였고, 청일전쟁기 제1군 사령관 야마가타 아리토히모는 1890년 일본의회 개원식상에서 조선이야말로 일본열도의 안전을 위해 확보해야 할 최소한의 이익선이라고 강조하였다. 일본의 조선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것은 군사력에 의한 방법뿐이었다.

5. 맺음말

지금까지 개항 이후 농민전쟁 직전까지 조선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흐름과 청일의 대한정책의 전개과정을 개략적으로 검토하였다.

조선의 세계체제 편입과정 시기,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대결구조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되었다. 조선의 개항은 시기적으로 세계체제의 중요한 전환기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즉 세계체제 중심부의 다원화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이 치열하게 나타나던 시기였다.

1882년 이후 조선이 본격적으로 세계체제에 노출된 이래 농민전쟁 시기까지 조선을 둘러싼 열강간 대결의 구조는 한편에서는 속방체제의 강화와 폐기를 둘러싼 청·일의 대립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세계체제 중심부의 다원화에 의한 영·러의 대립으로 나타났다. 특히 1882년의 '임오군란'을 계기로 청국은 의례적인 종속체제를 폐기하고 실질적인 속방화 정책을 기도하였고, 일본은 조선에서의 대외 위기의식의 확산을 통해 국내 체제 안정화 및 군비 강화에 이용하였다.

(공동연구 : 김기정, 김정기, 최덕수)

2. 지배층의 정치·사상적 동향

1. 머리말
2. 개항 전후 지배층의 동향
3. 갑신정변기 지배층의 동향
4. 갑신정변 이후 지배층의 동향
5. 맺음말

1. 머리말

본 장에서는 개항 이후 농민전쟁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기된 지배층의 정치·사상적 동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당시의 지배층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었다. 하나는 중앙의 정계에서 활동하였던 집권 관료 세력이었고, 다른 하나는 향촌사회에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재야의 보수적 유생층이었다. 그리고 전자는 다시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동도서기론에 입각하여 근대화를 추구하던 ‘민씨정권’과 일본식의 문명개화론에 입각하여 개혁운동을 주장하던 개화파로 나눌 수 있다.

당시 이들 지배층이 해결해야 했던 문제는 조선후기 이래 계속된 농민층의 몰락과 농민항쟁, 그리고 개항을 전후한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이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지배층들이 농민항쟁과 동학조직의 확산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하였는가, 또한 제국주의 침략을 어떻게 이해하고, 서양의 근대적인 문물을 어떤 식으로 수용하려고 하였는가, 그리고 집권세력 내에서 근대화의 이념과 방안은 어떠하였으며, 공통성과 차별성은 무엇인가 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고자 한다. 개항기, 갑신정변기, 그리고 그 이후 농민전쟁에 이르는 기간으로 나누어 각 집단들의 동향을 살펴보겠다.

2. 개항 전후 지배층의 동향

1) 집권관료세력의 구성과 근대화사업

개항을 전후한 시기의 집권세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력은 驪興 閔氏 척족세력이었다. 이들은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에 걸쳐서 老論의 유력 가문으로서 두드러진 활약을 했으나 세도정권기에는 두드러진 진출이 나타나지 못했다. 그러나 大院君 축출 이후 明成王后를 중심으로 핵심적인 가문으로 등장하였다. 그밖에 安東 金氏, 光山 金氏, 豊壤 趙氏, 南陽 洪氏, 潘南 朴氏, 青松 沈氏, 達成 徐氏, 延安 金

氏 등 노론계열의 유력 가문세력들이 민씨 척족세력과 함께 고위 관직을 寡占하고 있었다.

이 시기의 권력은 대원군 집정 이전의 세도정권기보다 노론 계열의 유력가문 세력에 의한 과점이 강화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첫째, 대원군 집정기에 이들 세력이 상당히 위축당한 것에 대한 반동적 대응의 결과라는 측면과 둘째, 이들 유력 가문 세력은 18세기 후반 이래 北學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어서 개항 이후 외래문물 수용에 다른 세력보다 빠르게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 가운데 이들의 현실 인식과 대응은 특히 두번째의 사상적 연원에서 비롯된다고 보아진다.

그들은 북학의 전통 위에서 '西勢東漸'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청국의 양무운동의 경험을 받아들여 서양의 기술문명을 받아 들이자는 '東道西器論'으로 전환하였다. 즉 동도서기론은 북학론을 시대적 조건에 따라 수정하면서 계승하는 논리였다. 이러한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朴珪壽, 吳慶錫 등이었다. 여기에서의 '東道'는 단지 동양의 도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교적 지배질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 본질은 봉건적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자본주의적 생산력을 발전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다시 정치권력의 재생산을 달성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개항 통상을 통한 상공업의 육성 필요성 등은 인식하였으면서도, 당시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한편 그들은 외세를 이용하여 외세를 몰아내려는 以夷制夷의 인 성격의 대외정책을 추구하였다. 『朝鮮策略』의 일정한 영향 하에 관세자주권 등 당시 대일관계 현안 타결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과의 교섭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서양의 기술문명을 수용하여 근대화를 추진한다는 이른바 '동도서기론'은 그들 근대화 방안의 핵심적인 논리였다. 개항 이후 "邪學은 마땅히 금할 뿐이지 그들과 間隙이 생기게 될 필요는 없다"고 하여, 洋人과 邪學을 다시 분리하였고, 나아가 서양의 '器'는 利用厚生할 수 있는 이로운 것이므로 '西洋의 器를 본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의 侮辱과 穢褻을 防禦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여, 서양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더 나아가 '斯文'의 보존을 위해서라도 서양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집권세력이 '서기'의 가장 우수한 측면으로 인식하여 우선적으로 취한 근대화 정책은 強兵策이었다. 국내적으로는 민중들의 저항을 억누르고, 대외적으로는 주권을 지켜나가기 위한 절대적인 수단이었기 때문이었다. 1881년 教鍊兵隊(別技軍)의 설치를 비롯하여, 領選使 일행의 중국 파견, 그리고 강화도에 海防總營을 설치한 것도 바로 이런 목적이었다. 그리고 機器局을 설치하고 그 산하에 機器廠을 두어 병기제조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들의 근대화 방안은 기본적으로 농민층의 항쟁을 해결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三政이라는 부세정책의 문란에서 농민층의 몰락과 항쟁이 비롯되었다고 파악한 세도정권기 집권 노론들의 입장과 동일하였다. 봉건적인 지주제는 유지하되 조세제도를 개정함으로써 농민 경제가 안정화되고 농민항쟁도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였던 것이다.

2) 보수 유생층의 척사상소운동

보수적인 유생층의 사상과 현실 대응론을 斥邪衛正論이라고 한다. 이러한 여론을 주도하고 학문적인 차원에서 체계화한 사람은 李恒老, 奇正鎭이었고, 이를 계승하여 현실문제 속에서 제기했던 사람은 이항로의 제자였던 金平默, 柳重教를 거쳐 崔益鉉, 柳麟錫, 그리고 기정진의 제자였던 奇宇萬 등이었다. 한

편, 이러한 척사론의 현실적인 대응에 일정하게 보조를 같이하면서도 독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영남지방, 주로는 李震相, 郭鐘錫, 李承熙 등을 중심으로한 星州지방의 南人들이 있었다. 이들은 당시 유생들의 처신의 기준이 되었던 學統이나 黨色은 달리하면서도 理를 중시하였던 점에서 공통성이 있었으며, 이런 점에서 正統 畿湖學派라고 할 수 있는 宋秉璿, 田愚 등과는 매우 달랐다.

병인양요의 발발과 개항, 1881년 척사상소운동에 이르면 이 시기에 재야의 유생층은 철저한 ‘人獸之別’에 입각한 화이관에 근거하여 현실문제를 파악하였다. 中華와 夷狄, 사람과 짐승의 분별은 곧 綱常이라는 유교적인 人性論과, 五行說에 의거한 유교적인 자연관에 의해 구분되었다. 우리나라는 물론 明 멸망 이후 唐虞 이래의 4천년 中華一脈과 孔孟 이래의 2천년 道學正統이 계승된 小中華였다. 그런데 개항을 거치면서 이 ‘人獸之別’ 논의는 일본에까지 확대되면서, 개항을 요구하는 倭는 洋賊의 앞잡이었다는 점에서 서양과 동일하다는 倭洋一體論을 주장하였다. 이런 禽獸의 침략으로 通色, 通貨의 폐단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이 중에서도 그들은 통화의 화가 더 큰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들의 상소운동은 『조선책략』에 의해 촉발되어 일어난 1881년의 척사상소운동 단계에 오면 나름의 일정한 변화, 발전이 나타나고 있었다. 곧 외세침탈에 의한 피해자로서의 유생층의 광범한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이었다. 즉 이전에는 주로 이항로의 제자들이 중심적으로 참여하였는데, 이때는 재야의 老論으로서 개항을 추진하는 노론 집권층을 비판하였고, 아울러 ‘뜻을 잃은 不逞輩’인 失勢한 남인, 소론 세력들에 의한 정권 침탈을 우려하면서 남인의 출현은 또 다른 洋賊의 출현이라고까지 하였다. 그런데 1881년 萬人疏에서는 개항 당시의 남인, 소론에 대한 정치적 위기의식은 없어지고, 척사론의 성격이 명백하게 제시되면서 서양세력과 동도서기론 정권을 비판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경상도의 남인들이 이 상소 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성주의 이진상은 副疏首가 되어 그의 제자들을 이 운동에 참여시켰다.

그리고 1881년 단계에 들면서 보수적 유생층 가운데서도 서양의 기술문명 수용을 주장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가령 이승희처럼 ‘실사 부득이 하여 取用할 것이 있다면 서서히 便否를 살펴서 去就를 헤아려야 하며, 妖賊을 급히 좇아서는 안된다’고 하였고, 1882년 임오군란 이후 그 수습책과 관련된 여러 상소 가운데 그런 점이 상당한 여론으로 제기되기도 하였다.

한편 그들은 외세의 침략을 막는 길은 근본적으로 국내의 정치에 있다는 ‘內修外攘論’을 거론하였다. 그들이 주장하였던 내수의 방안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역시 유교의 명분을 확고하게 유지하는 것이었고, 그 책임은 임금에게 있다고 지적하였다. 유교적인 勤王主義가 공통적인 해결 방법이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적 혹은 집단적으로 상소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였다. 그리고 농민항쟁에 대해서도 내수의양론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물론 그 태도의 기본은 ‘民惟邦本’이라는 전통적인 유교의 民本觀이었다. ‘小民이 안락하고 향상하면 나라가 불안한 것은 없으나 소민이 근심스럽고 피로우면 나라가 위태롭지 않음이 없다’는 생각이었다.

이들이 특히 문제삼았던 것은 토지소유 문제에서 야기된 농민층의 몰락이었다. 地主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도 항상 창고를 가득 메울 수 있고, 소작농민은 소작료를 납부한 외에도 다른 徵納이 많아 처지를 부양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여기에 三政의 문란으로 인한 增稅나 賦稅不均으로 인한 농민몰락도 지적하였다. 그 결과 피해를 받은 小民이 ‘어린 아이가 젖을 잃고 우는 소리’를 낸 것이 농민항쟁이라 인식하였다.

농민층의 몰락과 항쟁에 대한 그들의 수습책은 크게 두 측면에서 제시되었다. 하나는 불균등한 토지소

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조세제도를 개선·개혁하려는 것이었다.

토지소유문제의 해결은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제기되었다. 하나는 지주층의 土地兼併을 방지하고 이를 유교적인 차원의 井田制나 限田制에 입각한 토지재분배론이었고 다른 하나는 지주층의 지대수취율을 줄이는 減租論이었다. 이항로와 김평묵은 정전제로의 개혁을 주장하였고, 기정진과 이승희는 한전제를 거론하였으며, 減租論도 제기하였다. 또한 당시 농민몰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조세제도 문란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주로 부분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토지문제와 조세문제를 중심으로한 당시 사회의 모순점에 대한 유생층의 개혁안은 지주층의 이익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농민층의 안정을 꾀하였던 점에서는 집권관료세력의 토지문제 해결방안과 비교하면 혁신적인 면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방안은 기본적으로 보수적, 복고적이었다. 그 어느 경우이나 중세적인 신분제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들이 비록 ‘損其上 益其下’ 하는 방법을 택하기는 하였으나, 신분제 하에서의 토지재분배는 결국 기존의 지배층이 농민들보다는 유리한 입장에 있었던 점에서 중세적인 체제유지 방안이었고, 결국 중세적인 소농경영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3. 갑신정변기 지배층의 동향

1) 개화파의 형성과 갑신정변

1880년대에 들어 와서도 집권세력은 동도서기적인 근대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그 사업의 중심적인 기구는 통리기무아문이었다. 그런데 이때 동도서기적인 근대화로는 당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세력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른바 개화파의 등장이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개화사상을 ‘민씨 수구파정권’과 다른 성격으로서 오경석, 박구수에서 출발하여 1870년대에 들어와 급진(변법)개화파와 온건(양무)개화파로 분열하였다고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는 개화사상을 서양세력의 침탈을 막기 위해서 부국강병을 이룩해야 한다는 인식체계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인식은 당시 민씨척족세력을 비롯한 집권세력의 공통적 인식이었을 뿐 아니라 개화사상의 범주와 성격을 지나치게 넓힘으로써 동도서기론과 개화사상의 차별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된다.

개화사상은 동도서기론에서 출발하였으나 그로부터 질적인 도약을 한 사상체계로서 시기적으로는 1880년대에 들어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개화파는 개화사상을 지니고 개항 이후 통리기무아문을 통해서 성장한 세도가문 출신의 신진관료 세력들이었다. 이때 개화사상의 성립 계기는 지배구조의 변화가 없이는 정부의 근대화 노력이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한 것, 수신사나 신사유람단 등을 통해 일본의 명치유신이 이룩한 성과를 목격한 것과 청국의 주권 침해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개화사상이란 부국강병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근대적 지배구조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과 이를 위해서는 청국으로부터의 억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집권세력의 근대화 정책에 참여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갑신정변과 같은 정치적인 변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논리는 동도서기론에서 출발하였으나 연속적인 의미보다는 단절

또는 도약이라는 측면이 더욱 강한 것이었다.

개화파가 갑신정변에서 정당을 통해 제시한 것은 정치적으로는 민씨척족세력이 장악하고 있었던 통리기무아문을 해체하고, 의정부-6조체제를 근간으로 帝室內閣制를 수립하려고 한 것이다. 즉 근대화정책을 국가기구 전체적인 차원으로 격상시키는 것이었다. 경제적으로는 지주체를 근간으로 부세제도를 정비하고 불법수탈을 배제하여 요호부민층을 보호하고 농민층의 몰락을 방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조법을 개정하고 재정기구에 대한 왕실 및 척족세력의 개입을 배제시켜 국가재정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개혁구상은 위로부터의 부르주아 개혁운동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개화파는 아직까지 근대국가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이루기에는 시간적으로도 모자랐고 국제정세를 조선의 주체적인 관점에서 재구성하지 못했다. 따라서 자본주의열강의 침탈을 막아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으며 일본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지 못하고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것이다.

2) 보수 유생층의 개화파 반대

그들은 개항 이후 전개된 집권세력의 근대화사업은 물론, 개화파에 대해서도 그들의 활동이 기본적으로 일본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루어진 점을 비판하였다. 유인석은 일찍부터 일본과의 개항통상을 ‘천하망국의 근본이며, 문을 열고 賊을 받아들인 것’이라 하였으며, 갑신정변을 ‘君父를 무기로 위협하고 朝臣을 살륙한 정변’이라고 규정하였다.

개화파의 개혁사업 중에서도 특히 척사론자들이 반대하고 있었던 것은 變服과 斷髮의 시행이었다. 이것들이 바로 소중화를 금수로 떨어뜨리는 근본 원인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의복과 머리 모양으로 비로소 華夷와 貴賤, 男女가 구분될 수 있으므로, 변복과 단발은 바로 금수화의 상징이었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은 개화파의 모든 개혁이 외세에 依附하여 추진되고 있었던 점을 비난하였다. 갑신정변이 비록 ‘다섯 역적들이 한 것이지만 왜인들이 아니면 그 힘을 빌릴 수 없고, 왜인들이 아니었으면 그 생명을 도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1894년의 갑오개혁도 갑신년에 도망갔던 역적들이 방자하게 조정에 出仕하여, 갑신년의 역적들이 하던 술책대로 왜놈들을 끼고 궁궐을 에워싸고 君父를 협박한 것이며, 옛법을 혼란시키고 예의를 무너뜨려 없앤 것은 갑신정변보다도 더 심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즉 나라의 부강(부국강병)은 외세의 힘에 의존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이었다. ‘왜의 도움으로 부강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역시 해서는 안되는 일인데, 반드시 부강해지지도 못하고 모욕과 농락만 당할 것’이라 예견하였던 것이다. 이는 국권상실 후 ‘開化亡國論’으로까지 이어졌다.

4. 갑신정변 이후 지배층의 동향

1) 동도서기론자의 동향

갑신정변 이후에도 집권세력은 개화파를 ‘박멸’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는 있었지만, 동도서기론에 입각

한 근대화 사업은 계속하였다. 그들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지지세력을 획득하기 위한 신문발행 같은 사업도 계속하였고, 전선 가설 사업도 추진하였다. 또한 지주계 하에서 농업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농무 목축시험장 같은 기구, 혹은 자신들의 계급적 재생산을 위한 育英公院 등을 만들기도 하였다.

한편 청의 도움으로 갑신정변을 무산시키고, 그 후에도 청국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정권을 운영하면서 海防을 청국에 위임하였다. 그러나 청국의 의도는 조선에 대한 지배·예속관계를 수립하려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집권세력의 주관적인 의도와 달리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기상황이 초래되었다. 더구나 청국은 서구열강에 의해 위협 받는 상황이어서 보호막이 되지 못했고, 열강은 均霑利益權을 이용하여 조선이 청국에게만 부여하려고 했던 각종 특권을 장악하였으며, 그 결과 시장침탈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때에도 여전히 以夷制夷라는 방법으로 새로운 외세인 미국을 끌어들이었다. 연무공원, 육영공원, 농무목축시험장 등에 계속 미국인을 초빙한 것은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은 아직 적극적으로 아시아문제에 개입할 여력이 없어 조선문제에 불간섭원칙을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권세력의 이러한 시도는 좌절되었다. 집권세력의 이러한 시도는 결국 외세의 개입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었고, 1894년 농민전쟁이 확대되자 권력을 지키기 위해 또 다시 외세를 끌어들이게 되었다.

그런데 김윤식 등의 관료들은 민씨척족세력과 청국의 내정간섭에 대한 대처방안을 둘러싸고 대립하였다. 왕실과 민씨척족들은 청국의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朝露밀약을 추진하였는데, 김윤식은 이를 반대하고 민비의 정치간여를 막기 위해 대원군의 정권장악을 추진하려다가 발각되어 유배되었다.

그후 1890년대에 들어와 김윤식의 현실인식에는 약간의 변화가 나타난다. 그는 이때 개화를 開發變化, 즉 時務로 이해하고 유교적 질서를 전제로 한 위에서의 '개화'를 수용하였다. '因古之制 酌今之宜'로의 전환이 나타난 것이었다. 그는 지주와 요호부민을 생산력 발전의 주체로 설정하고, 이들에 대한 불법적인 침탈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이는 토지분배론을 봉쇄하면서 조세제도의 개혁을 통한 부르주아지의 육성에 관심을 갖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상업을 국가가 관장하여 申告制로 운영함으로써 租稅源을 확보하고 상인들을 보호·육성할 것을 구상하기도 하였다.

한편 집권세력은 당시의 농민층 동향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차원에서 대응하였다. 특히 이른바 교조신원운동 등 동학교도들의 움직임에 대해 탄압정책으로 일관하는 한편, 농민층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였다. 그것은 자신들이 표방한 근대화정책에 충당되는 재정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졌다. 더욱이 일본, 청국상인들의 침투에 대처방안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농민층의 몰락이 가속화되었고 그에 따라 1894년 농민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농민전쟁에서 반외세, 반봉건은 물론 반근대화의 구호가 나타나게 되었다. 한편 어윤중, 김윤식 역시 동학교도 또는 농민들의 동향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중 어윤중은 보은집회를 해산시키는 선유사의 직책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2) 개화파의 동향

갑신정변에 참여하였던 개화파들은 대부분 일본에 망명하였다. 그런데 일본정부가 갑신정변에의 간여를 은폐하기 위하여 그들을 냉대하자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등은 미국으로 가고 김옥균만이 일본에 남게 되었다. 김옥균은 국내의 지지세력과 연결을 도모하여 다시 쿠데타를 모의하기도 하고, 일본의 낭인

계열과 연합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기도 하였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그 후 김옥균은 일본정부의 갑신정변 개입을 폭로하기 위해 1885년 『갑신일록』을 저술하였다. 그리고 영국의 거문도 점령과 자신에 대한 암살음모에 촉발되어 상소를 작성하여 발표하였는데, 여기서 그는 갑신정변에서 민씨척족세력을 제거하려고 한 것과 일본세력 이용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청국이 열강으로부터 조선을 보호할 역량이 없다는 것을 제기하고 청국에 국방, 외교를 의지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구미세력과의 긴밀한 외교관계를 주장하였다. 내정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개혁, 상업진흥, 재정정리, 군사력 양성, 광산개발을 제시하고 양반제를 폐지하여 요호부민층을 보호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청국에 대한 인식에서는 시기가 흐름에 따라 어느 정도 변화가 나타났다. 그가 죽기 직전에 주장했다는 三和主義는 그동안 일본의 힘을 빌려 청국을 조선문제에서 배제시키려던 입장에서 청국과의 협력관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미국으로 간 사람들 가운데 서광범과 서재필은 미국으로 귀화하였으나, 박영효는 일본으로 돌아와 1888년에 작성한 ‘建白書’를 통해 내정개혁안을 정리하였다. 그의 개혁안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국력의 강화를 통한 주권유지, 군주권의 제한을 통한 정치구조의 변화(君民共治), 부세의 경감, 신분제의 개혁, 근대적 국가기구의 정비 등이었다. 이는 김옥균의 상소 내용과 같은 맥락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청국에 대한 비판적 자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오히려 러시아가 제 1의 적대국가로 상정되고 청국과는 ‘致謹’할 것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국내에서는 ‘신진개화파’라고 불릴 수 있는 집단이 성장하였다. 이들은 동도서기론자들에 의해 추진되었던 개혁의 실무판료로서, 주로 일본과의 관련 속에서 새롭게 성장해 온 세력들이었다. 이들은 대개가 庶子, 武官, 土班 및 中人출신들로서 신분·출신배경 때문에 민씨척족세력 중심의 정치구조에서 핵심세력으로 성장하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던 技術官僚적인 인물들이었다. 따라서 기존의 척족, 별열 출신들의 지배를 청산하려는 목표를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兪吉濬이었다. 그는 1891년에 저술한 「地制議」에서 토지분배론을 부정하고 지대율을 낮추어 농민경제를 안정시킨다는 방안을 생각하였다. 이때 地租改正을 통해 量田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주의 토지소유권은 地券의 발행을 통하여 근대법적으로 보호할 것을 구상하였다. 그런데 地稅의 半을 佃戶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법적으로 규정하려했다는 점에서 농민층 보호라는 측면은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다.

한편 이들 신진개화파들은 정부 기구들의 실무자 역할을 해온 사람들로서 농민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성립되었다. 특히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협조세력으로 이들을 지목하게 됨에 따라 세력결집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들의 개혁방안은 어떤 것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일본공사 오오토리(大鳥圭介)가 제시한 내정개혁안에 대해 자신들이 평소에 생각하던 바라고 대답한데서 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이 내정개혁안은 민씨척족의 정치간여 배제, 왕실과 정부의 분리, 조세제도의 개혁, 해관 운영권의 회수, 학교·경찰제도의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 보아 개화파들에 의해 갑신정변기에 제기되었던 개혁안을 반영하고 있으며 박영효의 ‘건백서’의 내용과도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제시한 개혁안은 조선 개화파들의 개혁 구상이나 다름 없었던 셈이다. 결국 신진개화파들의 개혁안은 근국기무처에서 수립한 의안 속에 대부분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정계에서의 연륜이나 출신 배경의 한계로 현실 정치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지 못했다. 따라서 대원군과 김홍

집, 김윤식 등의 동도서기와 관료들을 앞장세워 개혁을 진행시켜 나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3) 보수적 유생층의 동향

갑신정변 이후 보수적인 유생층은 중앙 정계와의 연관보다는 농민항쟁을 억압하고 향촌 사회 내에서의 봉건적인 지배 질서를 유지하고 장악하기 위한 활동에 관심을 기울였다. 유생층의 농민항쟁에 대한 대응은 鄕約의 실시로 나타났다. 농민층을 유교적인 체제와 사고방식으로 통제하고자 한 것이었다. 가령 성주지방에서는 유생층 내부적으로는 동족집단의 결속 강화, 가부장적인 봉건윤리의 확립 등을 위해서도 실시되었고, 또한 농민항쟁을 방어하고 봉건적인 질서, 신분제적인 질서를 유지하여 향촌사회 내에서 사족들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실시되었다.

1891년에 이승희가 제정한 屋山鄕約이 대표적이다. 이는 呂氏鄕約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過失相規의 節目에는 앞의 德業相勸에서 제시한 절목을 어긴 경우에 대한 규제를 정하였는데, 특히 左道(東學이나 天主教)를 믿든가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庶孽이 適子를 능멸하여 종족을 억압하거나 족장을 업신여기며 재산을 두고 다투는 행위, 부세의 납부에 불성실하고 고의로 국가의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 지적되었다.

이들은 또한 민중들 사이에 지지세력이 확대되고 있었던 동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부정적이었다. 일찌기 1863년 경상도의 尙州지방 愚山書院과 陶南書院에서는 도내의 儒林들에게 보낸 通文 속에서 동학을 '西學이 改頭幻名' 한 것으로 파악하기도 하였고, '동학은 사람을 도깨비로 떨어지게 할 것'이라 하면서 배척하는 여론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이승희는 보은에서 동학의 집회가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通論東學徒文」을 지어 동학이 正道에 어긋난다는 점, 서학을 배척하면서도 실제로 비슷해지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4. 맺음말

지배층은 당시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던 농민층의 항쟁과 민중의식의 확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일정한 차별성을 보였다.

먼저 보수적인 유생층은 구래의 중세체제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체제도전적인 농민항쟁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면서도 당시의 지주제가 가진 토지경병과 농민층 몰락에 대해서는 그 개선책을 구상하였다. 그들은 중세적인 신분제는 유지하는 가운데, 유교사회의 이상으로 거론되던 정전제 혹은 한전제를 거론하여 중세적 소농경제로의 복구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중세의 사회체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에서 서양의 침략을 반대하였다.

한편 집권관료세력은 제국주의의 침략을 정확하게 인식한 것은 아니었으나 근대화를 위해서는 유교의 기본적인 사회체제 원리는 인정하고, 서양의 기술문명을 수용해야 한다는 이른바 동도서기론으로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1880년 초반 절충론적인 동도서기론적 근대화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정치체제의 변혁을 통해 근대국가를 수립하려고 한 개화사상이 형성되었고 갑신정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런데 갑신정변 이후 왕실과 척족세력들이 근대화정책의 추진이라는 명목하에 농민층 수탈을 강화하고 청국의 내정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양세력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동도서기파 관료세력들이 배제되었다. 그에 따라 동도서기파 관료들은 개화사상을 유교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이게 되었으며 신진개화파 세력이 성장하기도 하였다. 이밖에 기존의 개화파들은 망명중에도 그들의 개혁구상을 보다 체계화하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비록 다른 지배층들에 비해 근대화 구상에 있어 선진적이었고 구체적이었으나 그들의 구상을 주체적 역량을 가지고 현실화시키기에는 사상적, 인적, 물적 준비가 부족하였다. 특히 그들의 외세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매우 미흡했다. 더욱이 그들은 농민층의 동향에 대해 적대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다른 지배층들과 근본적인 차이는 없었고 농민층의 몰락을 방지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농민군과 민씨척족정권을 타도한다는 점에서는 일치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결탁을 통해 농민군을 탄압하고 갑오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공동연구 : 연갑수, 주진오, 김도형)

3. 민중세력의 정치·사상적 동향

1. 머리말
2. 19세기 민중의식의 성장
3. 동학의 교리와 정치·사회사상
4. 동학교단의 조직과 지도부
5. 농민전쟁 지도부의 정치사상
6. 맺음말

1. 머리말

1894년의 농민전쟁을 주도해낸 19세기 민중은 어떠한 정치사상적 배경을 지니고 있었는가. 개개인의 민중이 중세적인 고립 분산성 속에서 거대한 항쟁 세력으로 결합될 수 있었던 역사적인 맥락은 무엇인가. 다양한 이해관계의 민중이 봉건적인 억압 속에서도 하나의 틀로 봉기에 나설 수 있었던 이념적인 기초는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을 규명하는 일은 봉기에 나섰던 민중의 의도와 목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우선 일반 민중이 중세사회의 피지배층으로부터 반봉건 민족운동을 주도해내기까지의 변화·성장 과정을 살펴보고, 나아가 이들을 이끌어 농민전쟁을 수행한 지도부가 추진하였던 정치적인 구상을 검토하겠다. 이런 문제들은 동학의 성립·발전과도 관련되었다. 따라서 19세기말의 정세하에서 동학의 사상과 조직이 차지하는 의미를 아울러 검토하고자 한다.

2. 19세기 민중의식의 성장

1894년의 농민전쟁은 조선후기 민중이 몇 단계에 걸쳐 변화·성장한 결과로써 이끌어낸 것이다. 생산력의 발달과 이에 따르는 생산관계의 변화는 분배문제와 더불어 지배구조의 변동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변동의 과정에서 피지배층들은 횡포한 봉건지배세력으로부터 그들의 권익이 더 이상 침탈당하지 않도록 저항하였으며 나아가 그들의 권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였다. 곧 19세기의 민중은 체제에 대한 저항운동과 함께 새로운 개혁운동을 전개해 나간 것이다.

1800년을 전후하여 최소한의 생존조차 어렵게 된 민중은 조선왕조의 일방적인 억압과 통치구조에 더 이상 순응하지만은 않았다. 특히 이 시기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생산력 발달에 따라 증대된 소득이 민중

에게 되돌려지지 않았던 점이였다. 봉건지배층은 민중이 일구어낸 성과를 강압적으로 침탈하였으며 민중은 그들의 침탈로 기대하는 성장을 이루어낼 수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우리들이 비록 손발에 못이 박히도록 일을 하더라도 끝내 우리 먹을 것이 없게 되는데 무슨 필요가 있어 농사지를 것인가.”¹⁾

이는 1798년의 상소문에 나타난 당시 여론의 한 대목으로, 과도한 수탈로 인해 생산의욕을 잃게되는 실상과 함께 수탈자에 대한 민중의 저항의식이 형성되는 모습을 전하고 있다.

봉건 지배층으로부터 부세수취를 통한 일방적인 수탈만을 강요받았던 민중은 이즈음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봉건적인 억압으로부터 도피해버리는 일이었다.

두 다리만이 남은 민중으로서는 도망해버리는 것 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과도한 수탈을 당하면서 봉건적인 틀안에 감내하며 지낼 필요가 없었다.²⁾ 지배기구에 대항할 별다른 방법이 없는 민중에게는 도망은 가장 보편적인 저항수단이 되었다. 이는 봉건체제를 거부하는 민중의식의 표현인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민중 상호간의 연대보다는 이기적인 이해가 우선하고 있었다. 이러한 의식으로는 다수를 점하고 있는 빈곤층에게는 일반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없었다.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생활 근거를 확보하고 있는 자들은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하였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축적한 부를 이용하여 지배층의 일원으로 상승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도 더 이상 성장하는데 한계가 왔다.

부세수취를 통한 침탈이 당장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의 해결에 서로 힘을 모아야 했다. 우선은 민중 상호간의 공통적인 이해기반을 확보하는 일이었다. 같은 고을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부세를 납부하였다. 부세 수취가 행해지는 행정조직을 따라 여론이 형성되고 의견이 집약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에 따라 戶布制를 채택하고 都結의 방안을 창안하여 시행하기도 했다. 이는 적극적인 문제해결의 의식을 담고 있었다. 중세사회 본질의 하나인 신분 차별을 민중 스스로 극복해 간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의식의 기저를 大同論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제 大同하게 한 후라야 편중되었던 피해를 나누어지게 되고 억눌렸던 것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게 된다. 그러니 今此大同之役 正是富民怨 而貧民惠인 것이다.”³⁾

우리는 당시 민중이 이상적으로 추구하였던 의식이 무엇인가를 大同法, 大同契, 大同庫, 大同分排之役, 大同譜 등 빈번하게 사용되는 ‘大同’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大同意識은 차별을 전제로 성립되는 중세적인 의식과는 차원을 달리 한 것으로서 민중을 이념적으로 묶어내는 기

1) 『承政院日記』 正祖 22년(1798년) 12월 20일 「前守衛官 尹溥 上疏」
 “竊聽村父老之相語 以爲吾輩雖手足胼胝 而畢竟吾無所食 何必農作爲也”

2) 硃批 正祖 22년 12월 22일 「前持平 尹在陽 上疏」
 “而其所持者 只有兩足可以逃避 不然則入訴官庭 列錄其族之族隣之隣 顧其心術實非良民也”

3) 『岐陽文牒』(1802년)

초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의식이 관권과의 관계에서도 순종적이거나 강압에 쉽게 굴복하지 않도록 만든 것으로 보인다.

관권에 대응하여 민중은 각 고을 단위로 자치적인 조직인 鄉會를 운영하였다. “이른바 향회는 한 가지 일만 있어도 모이고, 한 가지 지시만 내려도 모여서 선비들을 위협하고 민심을 소란스럽게 만들기를 다 반사로 하니 이런 폐습이 커져 장차 어떤 지경에 이를 것인지”⁴⁾ 라는 한탄이 나올 만큼 향회에서 민중의 의견을 모으고 집단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봉건통치의 일방적인 지배와 복종은 이렇게 거부되어 갔다. 나아가 민중은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하여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였다.

“不可不變通云 而始則通文焉 次則鄉會焉 又其次則邑訴焉 又其終則議送焉 故縣令認以爲大同之論”⁵⁾

그러나 이러한 운동은 체제내에서 문제해결을 생각할 때의 경우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만일 민중의 의지가 좀더 강렬해질 때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연대하여 성립된 민중의 요구가 경직된 체제에 수용되지 못할 때 이들의 의식은 다른 길을 찾게 되었다.

“거리에서 주고받으며 하는 말이 수령이나 감사는 무력하고 고식적이어서 그들에게 탄원해 봐야 효과가 없으니 분을 풀고자 한다면 문술만한 것이 없다라고들 말한다. 무명의 하찮은 자의 한 마디 의견에도 萬 사람이 호응하고 군중이 모여들어 변란을 일으킨다. 불량한 일을 드러내놓고 논의하고 난을 일으켰으니, 때로 양반에게 죄를 묻기도 하지만, 사실은 상민들이 겉으로 폐단 제거라는 명목을 빌어 안으로 평소 증오하는 양반에 대하여 원한을 갚으려는 계획인 것이다.”⁶⁾

60여년 전과 똑같은 막다른 심정을 묘사한 것이지만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집단적인 차원으로 그 양상이 바뀐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思亂久矣”(姜瑋, 『古歡堂收草』) 한 것이다. 당시로서는 亂이라는 표현 이상의 다른 설명이 불가능했겠지만 이 말에는 이미 亂 이상의 뜻을 담고 있다. 낡은 봉건체제를 한꺼번에 극복하려는 의식을 표현하였다. 비록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제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극복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히 인식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1860년대 이래 국지적인 항쟁을 무수하게 전개하였다. 그러나 민중의 요구를 역사에서 관철해 내기 위해서는 고을 단위의 항쟁이라는 한계를 극복하는 일이 큰 과제로 제기되었다.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포괄적인 조직을 갖추는 문제도 있었고 서로 다른 생활 공간을 연결해줄 수 있는 이념적인 매개도 필요하였다. 이에 지방 場市의 교통권이 여론 형성의 중요한 통로이었을 것이다. 전국적으로 발달해 간 流通商圏을 통해서도 교류와 여론 조성이 가능해 짐으로써 지역적인 분절을 극복해 낼 수 있었을 것이다.

또 안으로 반봉건 의식을 확립하고 밖으로 민중 상호간의 조직적인 연결을 확대하여야 했다. 이런 과

4) 『牒移』(1837년) “所謂鄉會…有一事則會之 出一令則會之 奢勒士類 騷擾民心 習成伎倆 視若茶飯 此習漸長 則末由之弊 將不知至於何境”

5) 『玉山文牒』(1851년)

6) 『승정원일기』 철종 13년(1862년) 8월 9일 「行護軍 李源祚 上疏」

정에서 조선후기의 실학자들과 실학사상이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종교적인 연결 고리도 중요한 매개로 작용하였다. 당시 중국을 통해 전래되고 있던 서학사상은 새로운 사고로 전환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반왕조적인 의식을 형성하는 데도 크게 작용하였다. 도참설이나 개벽신앙, 민간의 주술신앙, 그리고 좀더 체계화 된 신흥종교 등이 반조선왕조, 반체제 너머의 대안으로 수용되기도 하였다.

1893년의 보은취회는 동학을 매개로 하여 성립된 새로운 형태의 항쟁이었다. 침탈에 견디지 못하는 자, 常賤民으로서 발신하려는 자, 뜻을 펴고자 하는 자, 좋은 세상을 찾는 자, 민중을 위해 싸우려는 자 등 여러 다양한 성격의 민중이 모여들었다. 이렇게 모인 그들은 민회를 여는 것이라고 스스로 주장하였다. 다른 나라에서 정책을 논의 결정하는 바와 같은 민회라는 것이다.

부세수취에 대한 저항의 차원을 훨씬 뛰어 넘어 정책을 논의하고 수립해가는 단계에 도달한 것이다. 이때는 반봉건과 더불어 외세의 침략을 저지하는 문제에까지 의식이 미치게 되었다. 개인 차원에서 지역 공동체를 넘어 민족의 문제에까지 민중의식이 확대·발전된 것이다. 이러한 성장된 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투쟁이 전개되었을 때 “민중드른 처처에 모여서 말하되, 낮네 낮서 난리가 낮서, 에이 참 잘되얏지”(사발통문)라고 하면서 일반 민중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민중의 반응은 개혁운동에 대한 요구이며 바로 “모두 말하기를 왜 난리가 일어나지 않는가.”(黃玿, 『梧下記聞』)라고 하는 데에서도 분명히 드러나 있다. 그들의 요구사항들은 농민전쟁의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문건들에 구체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것이다(백산격문, 폐정개혁안 등).

19세기 수많은 항쟁을 통하여 형성된 민중의 의식은 “如全捧準者 藉賴東徒 以圖革命”(『갑오약력』)이라고 한 것처럼 1894년의 농민전쟁에서 지도부를 통하여 하나의 혁명 이념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3. 동학의 교리와 정치·사회사상

1) 동학의 사상적 연원

최제우는 국내외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직면하여 민중을 구하려는 사상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그는 유학적 지식인으로서 서학을 하나의 사상적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1) 유교 비판과 무위적 후천개벽

우선 그는 유학적 소양을 버리지는 못했지만 유학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예컨대 “유도 불도 누천년의 운이 역시 다했다”(교훈가)라든가 “요순의 다스림으로도 부족하고 공맹의 덕이라도 부족하다”(몽중노소문답가)라는 경전 가사에서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천지운행에 관련된 ‘一動一靜’, ‘一盛一敗’가 끝없이 반복되는 순환적인 天道에 눈을 떴다. 이것은 곧 「논학문」에서 “천도로서 無往不復之理를 받았다”고 말하여 천도가 자신의 중심사상이 되었음을 인정하였으며 이어 「劔歌」에서 ‘5만년의 시운’으로서 후천이 열린다는 확신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그는 이러한 후천은 개개인이 억지로 힘써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도의 운행과 같이 ‘無爲而化’의 자연적 조화에 의해 온다고 보았다. 유가의 ‘有爲’에 대립하는 도가의 무위 자연순응사상에 가까운 것이다.

(2) 현세 신선사상

당시 조선사회에는 장생불사하여 세속을 떠나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도가적 신선사상이 있었다. 「교

훈가」에 보면 “입도한 세상사람 그날부터 군자되어 무위이화될 것이니 지상신선 네 아니냐”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는 바로 그것을 수용한 흔적이며 다만 하늘나라의 신선이 아니라 입도와 동시에 현세에서 신선이 되는 무척 현실적인 신선으로 바꾸었다. 하지만 신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성껏 장생의 주문을 외면서 불사의 仙藥을 먹어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仙分’이 있는 사람은 「안심가」에서 “어화 세상사람들아 선풍도플 내 아난가 좋을시고 좋을시고 이내 신명 좋을시고 불로불사 하단말가” 하는 것처럼 지상신선이 된다고 하였다. 이는 고통스런 현실에 대한 지상천국으로서 바로 이 땅에서 신선세계를 구현 하려는 최제우의 바램이 드러나고 있다.

(3) 정감특적 도참사상

그는 당시 기충민중 사이에 뿌리내리고 있으면서 농민적 이상세계를 약속하고 있던 민중사상 중의 하나인 도참사상을 받아들였다. 「몽중노소문답가」에서 이러한 도참사상적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다. “곤륜산 일지맥의 조선국 금강산이……천하승지 아닐런가 삼각산 한양도읍 사백년 지낸 후에 하원갑이 세상……”으로 시작되는 그 첫부분은 이심, 이연 형제가 정감과 함께 금강산에 올라 조선의 미래를 예언하는 정감록 감결의 첫 부분과 흡사하다. 지금 혼란한 시기에 살아남는 비결은 ‘利在弓弓’ 뿐이라 하였다. 이제궁은 곧 후천개벽을 의미하는 예언적 비기로서 기충대중의 피난의식과 이상세계에의 동경을 담고 있다.

(4) 치병구복

기충민중에게 어쩌면 가장 두려운 존재는 언제 오는지 모르게 와서는 고통 속에서 생명을 앗아가는 질병의 마수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기충민중은 언제나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빌고 빌었다. 최제우는 이런 치병염원도 놓치지 않고 자신의 체계 속으로 끌어들었다. 즉 “나에게 영부(靈符)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선약이오……그 형태는 궁궁이니……사람들의 질병을 구하고 나의 주문을 받아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면”(포덕문)에서 부적과 선약으로써 질병을 고친다고 하는 전형적인 치병구복의 민간신앙의 한 모습을 이어받고 있음이 확인된다. 여기에는 “8도 불전에 시주하고 지성으로 山祭해서 백배축원 왕천하며 주소간 비는 날이 지성감천 아닐런가”(몽중노소문답가)라고 하여 불교와 어울어진 기복신앙까지도 최제우는 놓치지 않았다.

최제우는 위와 같은 정신적 편력의 과정에서 자신의 사상을 형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최제우는 초보적인 반의세관” 아래 자주외식의 단초를 보여 “도는 비록 천도이나, 학은 동학이다 운은 하나이고……도는 같으나 이치는 다르다”(논학문)고 논파한 대로 서학에 대응하는 뜻으로 자신의 사상 및 종교적 체계를 동학이라 이름지었다.

2) 동학사상의 특징

이처럼 동학은 유교적 세계관에서 출발하여 민중사상의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수용하여 하나의 체계를 이룬 사상이며 교리였다. 최제우라는 자연인에 의해 종합·정리된 동학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 사

7) “개같은 왜적놈을 하날님께 조화받아 일야에 떨하고”(안심가), “서양은 싸우고 빼앗아서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천하가 다 망하면 이 또한 曆亡齒寒의 근심이 어찌 없겠는가. 보국안민의 계책을 어디에서 생각해낼까”(포덕문), “서양사람은 도를 이루어 턱을 세우고 끝내 그 조화로 이루어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며 무기로 싸워 당할 자가 없다고 하니”(논학문) 등에서 그러한 반의세적 시각을 찾을 수 있다.

상적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첫째는 氣 일원론적 우주관 속에서 하늘님을 바로 자기와 일체화시킨 인간관 제시이다. 이때 氣는 성리학에서 말하는 理氣관계의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기 개념이 아니다. 인간의 생활공간에서는 ‘虛靈蒼蒼’하여 그 본질을 쉽게 알기 힘들으나 한편으로는 형태가 있는 듯하고 들을 수 있는 듯하여 인간과 교호할 수 있는 ‘至氣’의 상태로써 비인격적 인간화의 전단계로 파악되는 기이다. 이런 기론에 바탕한 인간관은 그 지극한 기를 자신의 정성에 따라 내 몸속에 영원히 모실 수 있는(=侍天主), 그리하여 하늘님과 하나가 되는 이른바 인내천 사상의 초기 모습이었다.

둘째는 무위이화의 조화 속에서 천도운행에 따른 선후천 순환운동론 확립이다. 무위이화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그리하여 그 조화가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이다(=造化定). 이것은 곧 현재의 부자와 가난한 자가 후천에서는 역전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지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희망적 내세를 보장하는 것이 된다. 이런 점에서 최제우의 무위이화는 빈부귀천의 생활질서에 먼저 적용되는 개념일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양태 골격은 따로 떨어져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呪文속에서 통일적으로 구현되고 있었다. 곧 “至氣今至 願爲大降 侍天主 造化定 永世不忘 萬事知”라는 21자의 주문 속에 일원적으로 들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최제우는 누구나 동학에 입도하여 정성껏 이 주문만 외운다면 동학이 제시하는 지상선경을 체험하고 현세의 안락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3) 동학사상의 정치사회적 의미

이렇게 하여 제시된 동학은, 봉건사회 내적 모순과 함께 서구 자본주의의 위협까지 떠맡아야 했던 당시 사회의 내외적 긴장관계를 일원적으로 파악되는 인간 중심의 기 개념과 예정조화적인 천도순환론을 통해 해소할 수 있었다. 그래서 동학은 당시 고통받는 기층민중에게는 하나의 복음이었다.

이는 곧 성리학의 자연법적 질서가 당시 봉건 지배체제를 옹호하고 있었다면, 그것과 대척점에서 인간 생활 중심의 질서를 내세움으로써 지배구조의 전도를 가능케 하는 눈을 열어주었다. 이러한 인식상의 전환은 중세적 가족주의를 극복하고 신분 및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의식을 갖도록 하였다. 그리고 서학 및 서구제국의 침략에 대응하는 반외세적·민족적 자각을 통해 유치한 수준에서나마 자국과 세계를 바라보게 했다.

그러나 최제우의 동학은 이렇게 기층민중의 염원을 반영하고 그들의 고통을 대변하는 가운데 근대적 인식을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종교적 입장에 안주하여 현실의 가파른 모순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를테면 1862년 농민항쟁기에 만들어진 「도덕가」는 농민항쟁의 충격을 반영하면서도 농민들과 같은 투쟁적 의식에는 이르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농민항쟁의 와중에서도 최제우는 ‘정심수도’를 강조했던 것이다. 또한 서양제국의 침략이 거세지더라도 후천개벽의 그날이 오면 모두 조화에 의해 해결될 문제였으므로 더 이상의 구체적 대응논리와 방안을 발전시키지 못하였다.

이런 입장은 결국 급박한 현실에 대한 우회적 대응론밖에 될 수 없었으나 최제우 자신의 관점에서는 어쩌면 합리적인 방안이었는지도 모른다. 곧 현실의 모순은 무위이화의 조화에 의하여 극복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각 개인은 ‘誠敬信’ 위주의 ‘守心正氣’를 다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최제우를 이은 2대 교주인 최시형의 단계로 오면 이러한 성향은 더욱 두드러진다. ‘시천주’라는 개념

이 '養天主'라는 개념으로 바뀌면서 수양적인 측면이 강조되는데, 「내칙」이나 「내수도문」, 「임사실천 10개조」 등이 나타난다. 최시형의 단계는 종교적 실천윤리의 확립과 함께 포교에 더 중점이 두어졌던 것이다. 이는 비록 불완전하였지만 현실적 모순관계에 대응하면서 창도된 초기(최제우 단계)의 동학이 점차 종교적 틀이 갖추어짐에 따라 드러나는 성격전환이라 하겠다.

따라서 안팎의 현실모순에 대한 투철한 투쟁, 이른바 반침략·반봉건의 과제는 이제 최제우라는 개인 혹은 그 종교적 집단에서 떠맡기보다는 그 당시 일정하게 형성되고 있던 사회변혁 세력의, 그리고 모순의 최종 담지자로서의 농민들의 거대한 힘이 분출되는 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했다.

4. 동학교단의 조직과 지도부

1) 수운 재세기(1860~1864)

1860년 無極大道를 깨달은 동학 교조 최제우는 조선후기 민중들에게 모순으로 가득찬 현실을 일거에 해소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眞人 또는 異人(理人)으로 인식되었다.

수운은 매월 초하루와 보름을 기해 入山行祭(設壇祭天)하면서 검가와 검무로 교도들을 훈련시키고, 교도가 많은 지방에서는 직접 순회하는 방식으로 그의 가르침을 퍼나갔다. 그 결과 1862년 12월 말 경상도 15개 고을에 接을 두고 16명의 接主를 임명할 정도로 조직화 되었다(接主制). 그러나 이러한 조직화는 동학을 서학의 이류 또는 잡술로 간주하던 보수유생들의 배척과 탄압에 부딪쳐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들의 폭발적 지지를 받으면서 3년만에 '조령에서 경주에 이르기까지 4백여리가 되는 고을고을에 동학 주문 외는 소리가 그치지 않을 정도로' 널리 전파되었다.

이 시기 동학교단은 어디까지나 수운 중심의 체제로 경주 일대가 주된 기반을 이루었고, 장차 2대 교주가 될 최시형(초명 경상)은 다만 제자 중의 한 사람으로 주로 경주 이북 지방에서 활동하였다. 그는 경주 이북 지방 포교활동의 공으로 1863년 7월 경 '北道中主人'으로 임명되어 일정한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한다.⁸⁾

2) 지하포교기(1864~1890)

동학의 급속한 전파는 추로지향을 자부하는 경상도 유림들로부터 배척과 탄압을 받기에 이르고, 급기야 1863년 12월 선전관 정운구에게 체포된 수운이 이듬해 '平世思亂, 暗地聚黨'의 혐의를 쓰고 처형됨으로써 동학은 불법화되었다. 그리하여 수운 재세시 반공개적으로 이루어지던 포교활동은 사라지고 지하포

8) 수운의 직접적인 영향 하에 있던 경주일대의 남쪽 지방에 비하여 최시형이 포교활동을 벌였던 지역은 대부분 경주 이북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하여 경주 이북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최시형을 '北道中主人'이라 불렀으며 후에 '北道'가 '北接'으로 바뀌어 '北接主人'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北接이란 수운 당시 최시형이 주로 포교활동을 벌인 경주 이북의 경상도 북부지방을 일컫던 명칭이며, 남접이란 수운 당시에 사용한 용례를 찾아볼 수 없으나 대체로 수운의 직접적 영향력 하에 있던 경주 일대를 지칭하던 명칭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동학교단에 있어서 남·북접의 구분은 수운 재세시부터 이미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이 이른바 농민전쟁 당시의 남·북접 쟁단의 기원이라 말할 수 있다.

교시대가 시작되었다. 최시형은 관의 지목을 피하여 日月山 龍化洞에 은신하여 북부출신 인사들과 밀접히 교류하면서 계를 통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매년 두번의 제사⁹⁾를 정례화하여 교단 재건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경주 이북을 중심으로 재건된 동학교단은 1870년 변란조직의 귀재 이필제의 참여로 중요한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수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伸冤을 명분으로 접근해 온 이필제를 중심으로 대다수의 교도들이 결속함으로써 이른바 ‘영해교조신원운동’이 일어나 최시형을 비롯한 교단 지도부 전체가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1871년 3월 10일 경상도 일대 18개 지방 5백여 명의 교도가 참여한 ‘영해교조신원운동’은 3백여 명이 죽거나 귀양가는 참담한 실패로 끝났으며, 이필제와 최시형 등 소수의 지도자만이 간신히 도망하여 강원도 남부 산악지대로 은신 하였다. 그해 8월 이필제가 또 다시 주도한 문경작변으로 명맥만 유지되던 교단 조직은 결정적으로 붕괴되었다. 그 결과 60년대 후반 경주 이북 지방을 중심으로 재건되려던 교세는 일거에 상실되고 말았다.

70년대에 들면 이필제와 같이 변혁지향적인 인물이나 지역적 기반을 가진 지도자가 부재한 가운데 최시형에 의해 교단재건이 주도되었다.¹⁰⁾ 1871년 내내 은신생활로 관의 지목을 피한 그는 파괴되버린 교단 재건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새로운 치제의식을 제정하여 설법제를 행하였다. 자신을 중심으로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수운문집의 편찬(『최선생문집도원기서』), 정기적인 수련활동의 재개, 동학경전의 집성(『동경대전』) 등으로 조직적인 포교활동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교세는 양양, 정선, 영월, 양구, 인제, 단양 등 영서지방이 중심이었으며, 정선의 유시현(유인상, 유도원), 인제의 김용진(김연국) 등이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하였다.

3) 신원운동의 기반형성과 그 전개

(1) 신원운동의 기반형성기

80년대 초반 동학은 강원도 영서지방의 산간 지대를 벗어나 청주, 충주, 보은, 공주, 목천, 익산, 부안 등 호서·호남의 평야 지대로 진출하였다. 청주의 손병희, 손천민, 임규호, 권병덕, 충주의 서병학, 보은의 황하일, 공주의 윤상오, 목천의 김은경, 익산의 박치경 등 훗날 보은취회와 농민전쟁에서 활약할 인물들이 대거 입교하였으며, 승려 출신 徐仁周(장욱, 호 일해)를 비롯하여 호서·호남 출신들이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84년 10월경에는 늘어나는 교도 관리를 위해 六任制가 시행되었고 공주의 가섭암, 익산의 사자암 등이 포교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수운 당시 남원 등지에 동학이 포교되었던 호남지방에도

9) 수운이 처형된 날인 3월 10일의 忌祭와 수운의 출생일인 10월 28일의 誕辰祭를 말한다.
 10) 동학교단에서의 최시형의 지도력은 언제나 불안정하였다. 수운제세시 최시형은 다만 군제자의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 수운과 같은 카리스마도 없었으며, 학문적 수준에 있어서도 다른 제자들에게 비해 보잘 것 없었다. ‘영해교조신원운동’ 당시에도 그는 이필제를 중심으로 교조의 신원을 주장하던 영해, 영덕, 영양 지방 동학 집주들에 비해 교도들에 대한 영향력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러나 1864년 3월 수운과 함께 경주 중심의 수제자들이 정배에 처해지고, ‘영해교조신원운동’의 실패로 영해, 영덕, 영양 출신의 인물들이 대부분 회생됨으로써 교단 재건이 최시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면서 비로소 그의 지도력도 강화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렇듯 불안정한 그의 지도력은 80년대, 90년대에도 마찬가지로여서 서인주, 서병학, 이관영, 전봉준 등과 같은 변혁지향적 인물들에 의해 끊임없이 도전받아 흔들렸던 것이 특징이었다.

80년대에 들어와 교세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호서·호남지방에 동학이 급속히 전파될 수 있었던 요인은 첫째는 동학 교단 자체의 성숙된 역량 즉 지도체제 확립, 경전 집성, 종교의식의 확립, 교도의 조직화 능력의 제고 등에 있었고, 둘째는 70년대 중반 이래 연속된 흉년과 질병, 정치적 부패와 무능, 조세수탈의 가중과 계급적 모순의 심화, 개항 이래 급증하는 외국상품의 유입과 미곡의 유출, 洋夷가 곧 침공할 것이라는 위기의식과 함께 민족 자주성에 대한 상실감 고조 등으로 말미암은 체제 위기와 민중들의 고난의 심각성에 있었다. 이같은 시대의 객관적 조건은 동학과 같은 신종교의 유행에 더없이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2) 신원운동 전개기

동학은 90년대 초기에 이르면 비약적인 교세 증가를 이룬다. 교세의 비약적 증가는 기존의 동학 교단 조직과 지도부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첫째, 80년대 전반까지 영남·영서 지방이 근간이 되었던 교세의 지역적 기반이 호서·호남지방으로 바뀌고 이 지역의 교세가 영남·영서의 교세를 능가하는 수준에 이르며,

둘째, 최시형을 정점으로 한 교단 지도부가 정비되는 가운데 신앙경력이 비교적 짧은 소장 지도자들이 부상하여 교도들을 직접 지도하게 되며,¹¹⁾

셋째 동학의 교리 해석에 일정한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졌다. 즉 80년대 이전 영서의 산악지대에 머물러 있던 동학의 사상적 기반에는 道·佛敎의 영향이 컸으나, 80년대 초 호서·호남 출신 인물들의 입교를 계기로 동학 교리를 유교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특히 80년대 초에 들어온 승려 출신 서인주의 역할이 90년대 초에 들어와 퇴조하고 유교적 소양이 강한 손천민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현상은 주목할 만한 변화였다.¹²⁾ 동학 교리의 유교적 해석은 보수 유생들로 하여금 동학을 오히려 주자학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사상이라고 인식하게 만드므로써 90년대 초 교조신원운동 전개의 정당성을 구축하였다.

넷째, 교도의 비약적 증가로 그간의 인적 결합조직인 接制가 지역적 결합조직의 성격이 강한 包制로 변화되었으며 포와 포, 접과 접간에 교세 확장을 위한 경쟁 현상이 일고 조직 내의 갈등 현상도 노정되었다. 이같은 현상은 후일 이른바 ‘남·북접의 갈등’ 과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게 된다.

다섯째, 長老級 지도자를 연원으로 하여 비교적 늦게 입도한 인물들이 90년대 초기에 소장 지도자로 성장하고, 이들을 따르는 교도들이 증가함으로써 교단 지도부와 호남의 소장 지도자들은 聯臂(접주에게 딸린 교도들을 말함)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그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교단 지도부의 지시보다는 자신의 포나 접에 속해 있던 다수의 하급 접주나 연비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쉬운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삼례취회 후 최시형을 法軒으로 추대하고 그를 중심으로 단결하기로 결의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90년대 초기 교세의 비약적 증가와 함께 대두된 현상들은 교단 지도부로 하여금 교도들의 요구에 부응

11) 장로급 교인들은 연령의 교령화, 교도 수의 증가 및 교세의 지역적 기반의 변동, 시대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대응의 한계, 판의 지속적인 지목 등으로 인하여 교도들을 직접적으로 지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70년대에 영남·영서 출신인 강시원, 유시현, 김연국이 두드러지고, 80년대에는 손병희, 손천민, 서인주, 황하일, 박치경 등이 부상하며, 90년대에 들어오면 김낙철, 손화중, 김개남, 김덕명, 서병학, 오지영 등의 활약이 단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위에서 지적한 이유에서이다.

12) 80년대 초에 동학에 입교한 서인주는 승려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80년대 동학의 의식과 제도 확립에 지대한 공이 있었다(오지영, 『동학사』 193~195쪽 참조)

하는 새로운 포교 방식을 채택하게 만들었다. 관의 탄압과 수탈을 피해 수동적으로 전개해온 지하 포교 방식을 청산하고 포교의 공인 획득을 위한 '스승의 신원'과 동학도에 대한 '가렴주구의 금지'를 요구하는 공개적이며 조직적인 운동을 전개하게 만든 것이다. 이 운동이 이른바 '교조신원운동'(교단측은 顯道運動이라 칭함)이다.

1892년 10월 공주취회부터 1893년 3월 보은취회에 이르기까지 동학 교단이 전개한 일련의 교조신원 운동을 통해 동학조직과 일반 농민들과의 결합의 계기가 조성되었다. 특히 호서·호남 소장 지도자들은 교단 지도부로 하여금 농민들의 고통에 동참하여 그들의 요구를 대변하도록 하여 동학조직과 일반 농민이 굳게 결합하게 하였다. 1893년 3월 보은취회에 동학 포교의 공인이나 동학도에 대한 가렴주구의 금지와 같은 요구사항을 내걸지 아니하고 '斥倭洋倡義'의 깃발을 내건 것이 좋은 예이다. 그리하여 1894년의 농민전쟁은 이상과 같은 동학 교단 지도부의 인식의 변화와 그것이 있게 한 호남 지방 출신 소장 지도자의 의지를 배경으로 일어나게 된다.

5. 농민군 지도부의 정치사상 —전봉준을 중심으로—

1) 1893년 급진적 동학교도 집단의 형성과 그 정치사상

1892년 동학교단은 교조 최시형의 신원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한다. 이 신원운동은 동학교단의 입장에서 동학포교의 공인을 요구하는 운동이었다. 그해 11월 삼례에서 열린 집회에 이어 1893년 2월 서울에서 전개된 복합상소의 과정은 교단 지도부의 입장과는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즉 일부 동학교도들이 외국공관 등에 '斥倭洋'의 방문을 내걸고 倭洋성토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일부 동학교도들은 '政府奸黨의 소탕'을 주장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 즉 동학포교의 공인운동이 정치적인 시위로까지 발전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때 이러한 운동을 주도한 것은 주로 전주지방에 근거를 둔 남접계통의 동학교도들로 보이나 그 지도자가 누구였는지는 불명확하다.

4월 초 동학교단 지도부는 보은에서 집회를 열고 시위로써 동학포교 공인운동을 다시 한번 전개하려 하였다. 같은 시기 전라도 금구에서는 남접교도들의 독자적인 집회가 열렸고, 그들은 보은집회에 모인 교도들과 합세하여 서울로 북상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이 계획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보은집회에 선발대를 파견하여 보은 집회의 분위기를 그들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하였다. 이때 그들이 내세운 '척양척왜'와 '탐관오리의 척출'이라는 구호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이 시기 반외세와 반봉건의 지향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이 시기 남접의 움직임은 주도한 것은 서인주(서장옥)와 전봉준 등이었다. 전봉준이 언제 동학에 입교하였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그는 동학에 입교한 이유에 대하여 "보국안민"이라는 동학당의 주의에 감동하고 있던 바, (중략) 동학당의 소위 '敬天守心'이라는主意에서 생각할 때에는 正心 외에 '協同一致'의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結黨하는 것의 중요함을 본다. 마음을 바로한 자의 일치는 간악한 관리를 없애고 보국안민의 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때문이다"¹³⁾ 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그가 동학에 입교한 의도가 정석모가 말한 대로 "동학교도에 의지해서 혁명을 도

13) 『東京朝日新聞』(1895년 3월 6일)

모하려는 데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2) 고부농민봉기시의 정치사상

1893년 봄의 보은, 금구집회는 수포로 돌아갔지만, 선진적인 고부지방의 동학교도들은 11월 전봉준을 중심으로 모여 봉기를 결의하게 되니, 이것이 이른바 ‘사발통문’에 담겨진 결의내용이다. 그들은 이때 동학교단층의 ‘교조신원운동’을 이용한 시위방식을 버리고, 동학교도만이 아닌 농민들을 직접 동원하는 방식을 통한 전국적인 농민봉기를 계획하였다. 즉 고부에서의 봉기를 기점으로 각지의 동학조직을 동원하여 전국적인 농민봉기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서울로 북상, 민씨정권을 타도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1894년 1월 전봉준 등은 고부에서의 봉기를 단행하였고, 이는 전국적인 농민봉기를 유도하고자 하는 전봉준 등 ‘사발통문’ 작성 집단의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 전봉준 등은 고부에서의 봉기를 성공시킨 뒤 각지의 동학접주들에게 연대 봉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타지역의 동학접주들은 아직 신중할 태도를 보였고, 3월초에 이르기까지 호응을 보내오지 않음으로써 고부지역의 농민들은 해산하지 않을 수 없었다.¹⁴⁾

3) 제1차 농민전쟁기의 정치사상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등의 호소에 의해 각지의 남접계통의 동학교도들은 마침내 고부, 백산으로 집결하게 되고, 이로써 제1차 농민전쟁은 고부, 백산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제1차 농민봉기시 전봉준의 정치적 목적은 민씨정권의 타도에 있었다. 즉 그동안의 국지적인 민란들이 수령들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면, 이제 제1차 농민전쟁은 ‘民弊之本 由於吏逋 吏逋之根 由於貪官 貪官之所犯 由於執權之貪婪’, 즉 탐관오리의 배후에 있는 집권세력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인식 위에서 출발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농민군 지도부에서는 민씨정권 타도 뒤의 대체권력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었는가. 그들은 羅州 공형에게 보낸 글에서 ‘聞於天陛 奉國太公監國 亂臣賊者 阿意諂容者 一併罷出之 本意止此而已’라 하여 대원군을 받들어 ‘난신적자’들을 축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대해 최근의 연구들은 전봉준 등이 독자적인 정권구상은 갖지 못하고 대원군의 섭정에 의지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전봉준 등이 전라도 지방에서 관군과 화약을 맺은 뒤 무장을 유지하고 집강소를 설치한 뒤 실질적으로 서정개혁에 참여했던 것을 볼 때, 전봉준은 대원군 세력과의 연합정권을 성립시킨 뒤 오히려 대원군의 명망성과 파단성을 이용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개혁 구상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려 했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¹⁵⁾

한편 전봉준 등은 3월 25일 발표한 격문에서 자신들의 뜻이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밖으로 횡포한 強敵의 무리를 구축코자 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14) 고부봉기는 여타의 민란들과는 분명히 다른 농민전쟁의 시발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즉 단순히 군수를 상대로 한 ‘국지적 민란’이 아니라 사발통문에 표시된 것처럼 민씨정권을 상대로 한 봉기인 것이다.

15) 전봉준은 후일 “대원군은 오래 정치를 행하고 威權이 심히 성했지만, 당시는 늙어서 정권을 잡을 기력이 없고, 원래 우리나라의 정치를 그르친 것도 모두 대원군이기에 때문에 인민이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4) 전주화약과 집강소기의 정치사상

전봉준 등 농민군지도부가 전주화약을 선택한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태에 대처하여 일보 후퇴하여 외국군의 철수를 유도한 뒤에 후일을 도모하자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농민군이 완전히 무장을 해제한 것은 물론 아니었다. 전봉준 등은 유동적인 상황에 대처하여¹⁶⁾ 농민군의 세력을 유지하고 전라도 일원에서도 개혁조치를 단행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都所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혁사업에 들어가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관(김학진)측의 승인을 얻어 執綱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이 시기 전봉준은 “일본의 행동, 대원군의 행동을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하여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힘써 동지들의 분격을 가라앉힘과 동시에 우리 정부의 동태를 알려고 하였다”(8월 11일)고 한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목표로 했던 민씨정권이 붕괴된 이후 대원군이 섭정으로 복귀하고 개화파가 정권을 장악한 새로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연구에서 주장하듯이 이 시기 전봉준 등이 개량적 개화파에 기대를 갖고 있다거나, 개량적 개화파와 합작하여 개혁을 도모하려 했다는 해석은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장은 김학진(개화파정권에 의해 병조판서에 임명되었으나 거부함)을 개량적 개화파로 보는 데 근거한 것이나, 그가 중앙정부의 명을 거스르면서 전봉준과 손을 잡은 것은 명백히 반개화파적 행동이었으며, 또 그의 정치적 성향도 개량적 개화파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집강소시기 전봉준은 일본군과 청군의 전쟁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어느 쪽이 승리하든간에 전쟁 후에는 그 총부리를 농민군측으로 돌릴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그는 농민군의 조직을 정비하고 무기와 군량미를 모으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8월 17일 일본군의 평양전투에서의 승리 이후 비로소 청일 양국군의 우열이 확실히 드러나게 되고, 일본측의 조선정부에 대한 간섭이 본격화되는 한편, 일본군의 농민군 진압 준비가 8월말에 시작되자 9월 중순경부터 전봉준은 제2차 봉기를 준비하기 시작한다(9월 14일 각처에 의병을 제창하는 통문을 보냄). 이후 준비과정과 농사철이 끝나기를 기다려 10월 14일 강경으로 출발함으로써 제2차 농민전쟁의 막을 올렸다.

5) 제2차 농민전쟁기의 정치사상

제2차 농민전쟁은 명백히 ‘반일구국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반개화파정권 투쟁’의 성격도 아울러 지니고 있었다. 이 시기 개화파는 “倭國과 체결하여 乘夜入京하여 君父를 뺏박하고 國權을 擅恣하는” ‘開化奸黨’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따라서 2차 봉기의 목적은 “왜적을 소멸하고 개화를 제어하며 조정을 청평하고 사직을 안보”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 한편 전봉준은 체포된 뒤 일본 정부에게 “일본병을 물러나게 하고 惡奸의 관리를 축출해서 임금 곁을 깨끗이 한 후에는 몇 사람의 柱石의 선비를 내세워서 정치를 하게 하고 우리들은 곧장 농촌에 들어가 常職인 농업에 종사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國事를 들어 한 사람의 세력가에게만 맡기는 것은 크게 폐해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몇 사람의 명사에게 協合해서 合議法에 의해서 정치를 담당하게 할 생각이었다”¹⁷⁾ 고 말하고 있으나 이 말을 그대로

16) 여기서 유동적 상황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은 5월 13일 총계영 병정 5백 명이 서울로 철병하고, 5월 18일 순변사 이원희, 19일 초토사 홍계훈이 전주에서 철수하여 서울로 돌아감으로써 전주에는 강화영병 2백 명만 남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17) 『東京朝日新聞』(1895년 3월 6일)

신빙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농민군 지도부는 독자적인, 혹은 김학진 등과 같은 비개화파의 개혁론자들과 연합하여 정권을 구성하고 개혁을 추진하려 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농민군의 반일구국항전은 현실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은 극히 적은 것이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전봉준 등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우리 동학당의 군은 훈련이 모자라고 무기는 완구적인 것이다. 사람, 무기 모두 일본병에 비길 수 있다고는 본디 믿지 않았던 바, 그렇지만 임금이 굴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는 법, 죽음을 당하고서 끝낼 결심을 갖고 일어섰다”고 말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농민군 지도부의 반일항전의 의지를 잘 읽을 수 있다. 농민군 지도부는 당시 상황을 외세의 침략에 의한 국가의 위기로 인식하였고, 위기에 처한 국가를 구하기 위해 봉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6. 맺음말

19세기 조선사회는 낡은 지배체제를 극복하려는 강렬한 민중운동이 연이어 전개된 시기이다. 이는 기존의 봉건체제가 당시 민중의 변혁의지를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민중의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회를 창조해가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시도들이 행하여졌다. 지배층과의 타협 속에서 문제 해결을 도모하거나 집단적인 시위로 그들의 요구를 관철하기도 했다. 혹은 종교적인 방법으로 대처해나가기도 했다.

동학은 그러한 종교적인 방안으로 모색된 것이며 바로 이 시대 민중의 정치사상적인 의지를 대변하고 있었다. 동학사상은 그 점에 있어서 일반민중의 개혁의지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중의 변혁에 대한 요구를 종교적인 조직과 사상으로 얼마나 수용해 낼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 점 농민군 지도부의 정치사상에서도 확인된다. 전쟁의 과정에서 농민군은 독자적인 정치구상을 보여주었으며 단계적으로 이를 관철해가고 있었다. 이미 성숙한 민중의식과 1860년대 이래 계속해온 항쟁을 통해서 형성된 1894년 농민군의 이념에는 혁명적인 성격이 내포되어 있었으며, 민중세력은 그 동안의 항쟁의 과정에서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어 왔던 것이다.

(공동연구 : 안병욱, 우윤, 박맹수, 박찬승)